

통일 한국의 위상

인쇄/1997년 12월 26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환경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16-8

6,000원

연구보고서 97-07

•
통일한국의 위상

옥 태 환
김 수 암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통일대비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및 국제문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전·현직 정부실무자, 학자, 언론인 등 분야별로 다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 현지근무 경력자 및 연구경력자 40명(한국: 20명, 미국: 20명)을 상대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의한 조사방식으로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사태들을 전망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통일시기와 통일방법을 예측해 보고 통일 이후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가능한 사태를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통일시기 및 통일방법

통일시기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7명(42.5%)은 2010년에, 15명(37.5%)은 2005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으로 예측, 총 조사대상자의 80%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보고 있다.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전문가 40명중 31명(77.5%)이 흡수통일을, 9명(22.5%)이 합의통일을 예상하고 있으며, 무력통일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다. 한편 한국전문가 80%와 미국전문가 75%가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예측하고 있어 대부분의 전문가가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통일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상

통일이 되면 한국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류·물류기지로 부상할 것이며, 역내 신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어느 편과 우방이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므로 대륙세력(중·러)과 해양세력(미·일)은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한국을 끌어 들이려는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고려할 때 19세기말과 같이 한반도가 양세력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이 동북아 신질서형성에 주요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일한국의 신장된 위상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동북아가 새로운 5강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북방지역으로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와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관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위협 의 소멸로 한·미 방위조약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한·미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닌 미·일과 같은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한반도 주둔 미군이 완전철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일간에는 해양 경계선을 두고 마찰이 지속될 것이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한·미·일 관계는 동북아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 결속으로 동북아에 신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에서는 미군의 감축으로 발생할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군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상로 확보를 구실로 해군력 증강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괄목할 수준이 될 것이며,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와 통일한국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해온 북한의 소멸로 전반적으로 역내에는 안보불안요인이 감소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이며,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구축에도 급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태시대의 중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국제사회의 북한지역 핵시설 폐기 요구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파괴 압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사력의 감축문제도 주변국들에 의해 제기될 것이다. 통일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통일한국군을 적정선 규모로 감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육군은 대폭 축소하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은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예상사태

통일한국정부는 구공산잔재를 일소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부자 우상화 상징물들을 철거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구공산당 간부와 한국전쟁 전범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합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총선을 실시하여 신정

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중 어느 체제가 통일한국 신정부에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각 정파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가 통일시까지 계속될 경우를 상정한 예상이며 조사당시의 한국의 정치체제가 내각제인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이 되면 좌파이념을 배제할 논리가 없어짐에 따라 구복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집단이 다양화되고 이로 인한 보혁 갈등으로 정치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초기에는 휴전선을 잠정 통제하면서 북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통일한국정부에 의하여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한국의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나 통일비용 과다부담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통일초기 주변 4국이 북한지역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나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고려할 때 주변국들의 이러한 접근은 매우 신중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한국정부는 국제화, 지역화 등의 새로운 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철도, 항만,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화폐를 통합하고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국영 및 공기업, 공장기업소, 집단농장 등을 민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지역 기업의 북한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명실공히 남북 경제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은 국제법상 원칙에 입각, 헌법체제의 범위내에서 북한의 채권·채무를 승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비용 과다부담으로 외채가 증대될 것이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콘소시움이 구성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면서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붕괴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보호 대책이 급선무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세금부담이 급증하며, 통화남발과 물자공급의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남한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난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랫동안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해 온 북한지역 주민들은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집단적·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패배의식, 자신감 상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스로 이등국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남북지역 주민들간에 심리적 장벽이 생성되고 지역갈등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아 대량 남하하는 경우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는 수용한계를 넘어 치안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 틈을 이용해 범죄가 급증하면 사회전체가 혼란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정부가 북한지역 주민보호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량 인구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치안공백이 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통일한국정부는 남북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해서 학제를 개편하고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교육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북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학술·예술분야에 이어 제분야의 용어를 통합함으로써 언어차이로 인한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아울러 문화적·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계는 전통문화 구현을 위한 과거회복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소멸로 주둔명분이 없어진 유엔사가 해체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이와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으로 불필요해진 용산 등 미군기지들이 한국으로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대통합으로 군복을 벗게 되는 북한군 장교들의 집단 무력시위나 일부 극력분자들의 공비화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이 못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통일과 동시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통일이 달성되었음을 가시적으로 알리면서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간 세력국가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3세계 외교를 활성화하고 UN평화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태 평화·안보 기구를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간세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으나 통일비용 부담 등으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대외원조를 증가시킬 여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4. 시기별 발생가능 예상사태

통일 이후 발생가능 예상사태를 시기별로 분석하면 통일원년에 통일한국은 대외적으로 남북한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하며, 북한의 소멸로 존속명분을 상실한 UN사령부를 해체하고 전 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며, 북한의 대외채권·채무를 승계하고, UN평화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이상화 상징물을 철거하고 역사재평가를 통하여 공산정권의 잔재를 신속히 없애면서 북한 지역주민의 대량실업에 따른 북한지역 주민 생활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인구이동과 사회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도층의 일부 저항이 예상되나 이 문제가 치안공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의 핵처리문제와 생화학무기 파기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듬해에는 북한지역 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한기업의 대북진출도 활발해져 북한지역 경제재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자원 마련 때문에 남한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위협의 소멸로 주둔명분이 약해진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면서 한·미

방위조약이 재검토되는 등 한·미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 3년째에는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며, 학제를 통합하고 문화·예술분야 용어도 통합하는 등 남북주민들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며, 육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공군을 증강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군편제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따른 생활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자 이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고 노사분규가 심화되면서 남북주민들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경제교류가 가속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면서 두만강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가 급진전되면서 통일한국이 아·태평화안보기구 창설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4년째는 한반도 통일 정착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며, 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필요없게 된 용산 등 미군기지가 한국으로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국가들은 해상로 보호를 위하여 해군력을 증강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통일 5년째에는 통일한국이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북한재건에 성공하여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며,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새로운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아울러 제3세계 외교도 활성화하여 명실공히 선진국과 후진국을 잇는 중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여 통일 6년째가 되면 통일한국은 동

북아에서 5강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 10년째가 되면 대외원조를 확대하는 등 명실공히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견되는 사태들이 대부분 통일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통일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예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통일초기 대혼란으로 자칫 통일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 목 차 —

I. 서 론	1
II. 통일시기 및 통일방법	3
III. 통일 이후 예상사태	6
IV.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상	19
1. 한반도 지정학적 위상 변화	19
2. 동북아지역 안보상황	24
3.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	33
V. 분야별 주요 예상사태	40
1. 정치분야	40
2. 경제분야	55
3. 사회분야	74
4. 문화분야	86
5. 군사분야	93
6. 외교분야	105
V. 결 론	114
<부록 I> 설문조사자 명단	120
<부록 II> 분야별 예상사태 도표(가중치 49이하)	123
<부록 III> 델파이 1, 2차 설문서	132

I. 서 론

본 보고서는 통일대비연구의 기초자료 마련 차원에서 한반도 및 국제문제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의한 조사방식으로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사태들을 전망한 것이다.

델파이 기법은 정량적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상황을 전망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전문가그룹의 견해를 계량화시킴으로써 미래예측에서 개인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되어 세계에 보급되었으며, 미래학자들간에 미래상황 예측방법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델파이 기법에 의거 통일원은 1984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향후 10년의 통일환경 정세예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남북한관계의 변화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그 후속연구로 통일시기와 통일방법을 예측해 보고 통일 이후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가능한 사태를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 연구원은 한국인 전문가 20명에게 통일한국의 국내·국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태 각각 10개씩과 그 근거를 백지(blank paper)에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105가지 예상사태를 선정, 이를 토대로 2차 설문서에서 발생가능성과 발생예상시기를 기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2차 설문조사시에는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20명을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연구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선정과 설문서 작성

2 통일한국의 위상

및 수집인데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전·현직 정부실무자, 학자, 언론인 등 분야별로 다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 현지근무 경력자, 연구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반도문제 전문가 40인에 대한 프로파일은 <부록 I>에 수록했다.

설문서에는 미래에 예측되는 사태의 명칭, 발생이유, 시기를 명기하는 서식형태를 취하고, 언급한 내용의 의미나 사용한 단어에 주관적 해석의 개입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빈도수에 따라 예상사태를 분류하였다. 또한 예상사태가 다소 중복되는 듯한 문항이 있으나, 본 연구의 신뢰성 일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대로 실기로 하였다.

II. 통일시기 및 통일방법

통일시기와 방법을 예측하는 문제는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답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문항 중 가장 어려운 설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문제는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7명(42.5%)은 2010년에, 15명(37.5%)은 2005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으로 예측, 총 조사대상자의 80%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보고 있다<표 2-1>. 또한 한국전문가 20명중 9명(45%)이 2010년을 통일의 해로 본 반면<표 2-2>, 미국학자 20명중 9명(45%)이 2005년을 통일기점으로 보고 있어<표 2-3> 한국전문가보다 미국전문가가 통일시기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2-1> 통일시기(전체)

연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2000	2	5.0	5.0
2005	15	37.5	37.5
2010	17	42.5	42.5
2015	2	5.0	5.0
2020	2	5.0	5.0
2020이후	2	5.0	5.0
합계	40	100.0	100.0

4 통일한국의 위상

<표 2-2> 통일시기(한국전문가)

연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2005	6	30.0	30.0
2010	9	45.0	45.0
2015	1	5.0	5.0
2020	2	10.0	10.0
2020이후	2	10.0	10.0
합계	20	100.0	100.0

<표 2-3> 통일시기(미국전문가)

연도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2000	2	10.0	10.0
2005	9	45.0	45.0
2010	8	40.0	40.0
2015	1	5.0	5.0
합계	20	100.0	100.0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전문가 40명중 31명(77.5%)이 흡수통일을, 9명(22.5%)이 합의통일을 예상<표 2-4>하고 있고, 한국전문가 80%<표 2-5>와 미국전문가 75%<표 2-6>가 흡수통일을 예측하고 있어 대부분의 전문가가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통일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중 한 사람도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 등 극도의 위기상황하에서도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4> 통일방법(전체)

통일방법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흡수통일	31	77.5	77.5
합의통일	9	22.5	22.5
무력통일	0	0.0	0.0
합계	40	100.0	100.0

<표 2-5> 통일방법(한국전문가)

통일방법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흡수통일	16	80.0	80.0
합의통일	4	20.0	20.0
무력통일	0	0.0	0.0
합계	20	100.0	100.0

<표 2-6> 통일방법(미국전문가)

통일방법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흡수통일	15	75.0	75.0
합의통일	5	25.0	25.0
무력통일	0	0.0	0.0
합계	20	100.0	100.0

Ⅲ. 통일 이후 예상사태

본 장에서는 분석된 총괄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한국 등장 이후 10년간 국내외 국제관계에서 발생가능한 사건들과 발생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생 예상사태와 시기별 예측을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압축시켜 만든 델파이 2차 조사설문서에서 수집된 발생가능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한 발생가능성의 강도(여기서 부여된 가중치는 발생가능성이 '아주가능'에 2.5점, '약간가능'에 1.25점, '모른다'에 0점, '없다'에 0점을 부여하여 분석한 것이며, Scale은 100이다)와 최빈년도를 발생예상시기로 정하여 정리한 것이다(여기서 U1은 통일원년, U10은 통일후 10년차를 말한다).

위와 같은 분석에 의거 발생가능성에서 가중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예상사태는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등 통일한국이 통일과정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통일국가로 출발하기 위해 대내·대외적으로 가장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표 3-1>.

<표 3-1> 예상사태(전체순위)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98	U1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98	U2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95	U3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94	U2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94	U3
우상화 상징물 철거	91	U1
북한주민의 재교육	91	U2
화폐통합	90	U1
역사재평가	90	U1

예상사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90	U1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90	U1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90	U1
정치집단 다양화	89	U1
주한미군 감축	89	U2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88	U2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88	U1
역내 경제교류 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중심지로 부상	86	-
유엔사 해체	86	U1
북한의 대외채권·채무 승계	85	U1
재정적자 심화	85	U2
육군 축소 및 해·공군력 증강	85	U3
북한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84	U2
학제통합	84	U3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 강화	84	U5
한·미 방위조약 개정	84	U2
세금부담 급증	83	U2
북한주민 대량실업	81	U1
북한주민의 열등의식	81	U1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81	U1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81	U4
총선 실시	80	U1
문화·학술 분야 용어 통합	80	U3
북한지역 땅투기	79	U2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 제정	78	U2
남북한주민 갈등	78	U3
북한지도층 망명	76	U1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 반납	76	U4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 추구	76	U5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75	U1
지역갈등 심화	75	U3
한·러 경제협력 강화	75	U2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74	-
외국인 투자 증대	74	U3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74	U1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	73	U3
사회불안정	71	U1
범죄증가	70	U2

8 통일한국의 위상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빈도
토지소유권 분쟁	68	U1
북한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68	U1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66	U1
대통령중심제	66	U1
두만강지역 본격 개발	65	U3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64	U1
한·러 관계 개선	64	U3
대규모 인구이동	63	U1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변수	63	-
제3세계 외교 활성화	63	U5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61	U3
노사분규 심화	61	U3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61	U1
아·태 평화·안보 기구 창설 주도	61	U3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60	U3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59	U2
동북아 5강 체제화	58	U6
이산가족 상속문제	58	U1
해군력 증강 경쟁	58	U4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56	-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56	U2
휴전선 통제	55	U1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 혼란	54	U5
좌파정당 활성화	54	U3
과거청산	54	U3
물가폭등	54	U2
내각책임제	54	U1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각	51	U2
정치혼란	51	U1
한·일간 해양 경계선 마찰 심화	50	U3
미·중간 관계 악화	49	U3
북한지도층 저항	48	U1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	46	U3
미군 철수에 따른 역내 군비 경쟁 심화	46	U5
한·미 동맹 강화	45	U1
해상로 확보 구실로 일본의 전진방어 정책 선언	43	U3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41	U3
주한미군 완전철수	40	U5
북한군 장교집단 무력시위	40	U1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한·일 우호관계 강화	40	U2
이산가족 중혼문제	39	U1
대외원조 확대	38	U10
영토분쟁으로 지역안보 위협	38	U3
한·중 군사우호 관계 강화	36	U3
치안공백	35	U1
한·중 국경분쟁	34	U3
한·일 관계 악화	34	U3
한·미 관계 소원화	31	U2
한·중 외교적 갈등 심화	30	U3
신수도 선정	29	U1
북한 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한·중 갈등	29	U2
북한군 일부 무장공비화	28	U1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와 중·러 관계 결속	28	U5
주변4국의 북한지역관리 참여	26	U1
미·일 동맹체제 악화	24	U2
미국식 연방제	21	U1
사할린 동포 문제로 마찰	21	U3
북방 지역 국경 재조정	19	U5

* 최빈년도 표시가 없는 항목은 지정학 관련 예상사태임.

이상의 105개 예상사태 중 국내문제 관련 최빈예상사태 상위그룹을 분석하면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을 단일화해 명실공히 통일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대내적으로는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등 군사관련 문제,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과 화폐통합 등 경제관련 문제, 우상화 상징물 철거와 북한주민의 재교육, 역사재평가 등 북한잔재 정리와 관련된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집단이 다양화되는 변화가 예상된다<표 3-2>.

<표 3-2> 예상사태 (국내문제 순위)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98	U1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98	U2
국도종합개발계획 추진	95	U3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94	U2
북한주민의 재교육	91	U2
우상화 상징물 철거	91	U1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90	U1
역사재평가	90	U1
화폐통합	90	U1
정치집단 다양화	89	U1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88	U1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88	U2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중심지로 부상	86	-
육군 축소 및 해·공군력 증강	85	U3
재정적자 심화	85	U2
북한의 대외채권·채무승계	85	U1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 강화	84	U5
학제통합	84	U3
북한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84	U2
세금부담 급증	83	U2
북한주민의 열등의식	81	U1
북한주민 대량실업	81	U1
문화·학술 분야 용어 통합	80	U3
총선 실시	80	U1
북한지역 땅투기	79	U2
남북한주민 갈등	78	U3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 제정	78	U2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 추구	76	U5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 반납	76	U4
북한지도층 망명	76	U1
지역갈등 심화	75	U3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75	U1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74	U1
외국인 투자 증대	74	U3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74	-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	73	U3
사회불안정	71	U1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범죄증가	70	U2
토지소유권 분쟁	68	U1
대통령중심제	66	U1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66	U1
두만강지역 본격 개발	65	U3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64	U1
제3세계 외교 활성화	63	U5
대규모 인구이동	63	U1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61	U1
노사분규 심화	61	U3
이산가족 상속문제	58	U1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56	U2
휴전선 통제	55	U1
물가폭등	54	U2
과거청산	54	U3
좌파정당 활성화	54	U3
내각책임제	54	U1
정치혼란	51	U1
북한지도층 저항	48	U1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	46	U3
북한군 장교집단 무력시위	40	U1
이산가족 중혼문제	39	U1
대의원조 확대	38	U10
치안공백	35	U1
신수도 선정	29	U1
북한군 일부 무장공비화	28	U1
미국식 연방제	21	U1

국제문제 관련 최빈예상사태 상위그룹에는 한·중 및 한·러경제교류 가속화가 예상되는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및 생화학무기 파기 압력과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의 소멸로 주둔명분이 약해진 주한미군 감축논의와 함께 유엔사 해체, 한미방위조약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표 3-3>.

<표 3-3> 예상사태 (국제문제 순위)

예상사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94	U3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90	U1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90	U1
주한미군 감축	89	U2
유엔사 해체	86	U1
한·미 방위조약 개정	84	U2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81	U4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81	U1
한·러 경제협력 강화	75	U2
북한소셜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68	U1
한·러 관계 개선	64	U3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변수	63	-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61	U3
아·태 평화·안보 기구 창설 주도	61	U3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60	U3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59	U2
동북아 5강 체제화	58	U6
해군력 증강 경쟁	58	U4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56	-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 혼란	54	U5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각	51	U2
한·일간 해양 경계선 마찰 심화	50	U3
미·중간 관계 악화	49	U3
미군 철수에 따른 역내 군비 경쟁 심화	46	U5
한·미 동맹 강화	45	U1
해상로 확보 구실로 일본의 전진방어 정책 선언	43	U3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41	U3
한·일 우호관계 강화	40	U2
주한미군 완전철수	40	U5
영토분쟁으로 지역안보 위협	38	U3
한·중 군사우호 관계 강화	36	U3
한·일 관계 악화	34	U3
한·중 국경분쟁	34	U3
한·미 관계 소원화	31	U2
한·중 외교적 갈등 심화	30	U3
북한 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한·중 갈등	29	U2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 관계 결속	28	U5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주변4국의 북한지역관리 참여	26	U1
미·일 동맹체제 약화	24	U2
사할린 동포 문제로 마찰	21	U3
북방 지역 국경 재조정	19	U5

다음으로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105개의 예상사태를 최빈년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4>.

<표 3-4> 발생가능 연도별 예상사태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98	U1
우상화 상징물 철거	91	U1
화폐통합	90	U1
역사재평가	90	U1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90	U1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90	U1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90	U1
정치집단 다양화	89	U1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88	U1
유엔사 해체	86	U1
북한의 대외채권·채무 승계	85	U1
북한주민 대량실업	81	U1
북한주민의 열등의식	81	U1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81	U1
총선실시	80	U1
북한지도층 망명	76	U1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75	U1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74	U1
사회불안정	71	U1
토지소유권 분쟁	68	U1
북한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68	U1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66	U1
대통령중심제	66	U1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64	U1

14 통일한국의 위상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대규모 인구이동	63	U1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61	U1
이산가족 상속문제	58	U1
휴전선 통제	55	U1
내각책임제	54	U1
정치혼란	51	U1
북한지도층 저항	48	U1
한·미 동맹 강화	45	U1
북한군 장교집단 무력시위	40	U1
이산가족 중혼문제	39	U1
치안공백	35	U1
신수도 선정	29	U1
북한군 일부 무장공비화	28	U1
주변4국의 북한지역관리 참여	26	U1
미국식 연방제	21	U1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98	U2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94	U2
북한주민의 재교육	91	U2
주한미군 감축	89	U2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88	U2
재정적자 심화	85	U2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84	U2
한·미 방위조약 개정	84	U2
세금부담 급증	83	U2
북한지역 땅투기	79	U2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 제정	78	U2
한·러 경제협력 강화	75	U2
범죄증가	70	U2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59	U2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56	U2
물가폭등	54	U2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각	51	U2
한·일 우호관계 강화	40	U2
한·미 관계 소원화	31	U2
북한 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한·중 갈등	29	U2
미·일 동맹체제 약화	24	U2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빈도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95	U3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94	U3
육군 축소 및 해·공군력 증강	85	U3
학계통합	84	U3
문화·학술 분야 용어 통합	80	U3
남북한주민 갈등	78	U3
지역갈등 심화	75	U3
외국인 투자 증대	74	U3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	73	U3
두만강지역 본격개발	65	U3
한·러 관계 개선	64	U3
노사분규 심화	61	U3
아·태 평화·안보 기구 창설 주도	61	U3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61	U3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60	U3
좌파정당 활성화	54	U3
과거청산	54	U3
한·일간 해양 경계선 마찰 심화	50	U3
미·중간 관계 악화	49	U3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	46	U3
해상으로 확보 구실로 일본의 전진방어 정책 선언	43	U3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41	U3
영토분쟁으로 지역안보 위협	38	U3
한·중 군사우호 관계 강화	36	U3
한·중 국경분쟁	34	U3
한·일 관계 악화	34	U3
한·중 외교적 갈등 심화	30	U3
사할린 동포 문제로 마찰	21	U3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81	U4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 반납	76	U4
해군력 증강 경쟁	58	U4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 강화	84	U5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 추구	76	U5
제3세계외교 활성화	63	U5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 혼란	54	U5
미군 철수에 따른 역내 군비 경쟁 심화	46	U5
주한미군 완전철수	40	U5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와 중·러 관계 결속	28	U5
북방 지역 국경 재조정	19	U5
동북아 5강 체제화	58	U6
대의원조 확대	38	U10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면 통일원년에 통일한국은 대외적으로 남북한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하며, 북한의 소멸로 존속명분을 상실한 UN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며, 북한의 대외채권·채무를 승계하고, UN평화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이상화 상징물을 철거하고 역사재평가를 통하여 공산정권의 잔재를 신속히 없애면서 북한지역주민의 대량실업에 따른 북한지역 주민 생활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인구이동과 사회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도층의 일부 저항이 예상되나 이 문제가 치안공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지역의 핵처리문제와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듬해에는 북한지역 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한기업의 대북진출도 활발해져 북한지역 경제재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남한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위협의 소멸로 주둔명분이 약해진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면서 한·미 방위조약이 재검토되는 등 한·미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 3년째에는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며, 학제를 통합하고 문화·예

술분야 용어도 통합하는 등 남북주민들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며, 육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공군을 증강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군편제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따른 생활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자 이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고 노사분규가 심화되면서 남북주민들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경제교류가 가속화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면서 두만강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가 급진전되면서 통일한국이 아·태 평화·안보기구 창설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4년째는 한반도 통일 정착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며, 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필요없게 된 용산 등 미군기지가 한국으로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국가들은 해상로 보호를 위하여 해군력을 증강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통일 5년째에는 통일한국이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북한재건에 성공하여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middle power)으로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며, 높아진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새로운 외교노선을 추구함과 아울러 제3세계 외교도 활성화하여 명실공히 선진국과 후진국을 잇는 중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여 통일 6년째가 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5강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 10년째가 되면 대외원조를 확대하는 등 명실공히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견되는 사태들이 대부분 통일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통일

18 통일한국의 위상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예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통일초기 대혼란으로 자칫 통일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IV.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상

본 장에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 변화 및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 등 통일한국의 위상과 관련된 예상사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IV장과 V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망한 105개 예상사태 중 가중빈도 50 이상으로 비교적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77개 예상사태를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반도 지정학적 위상 변화

전문가들이 본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 관련 사태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과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부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각축 등 4개 항목이 예상되고 있다<표 4-1>.

<표 4-1> 한반도 지정학적 위상 관련 예상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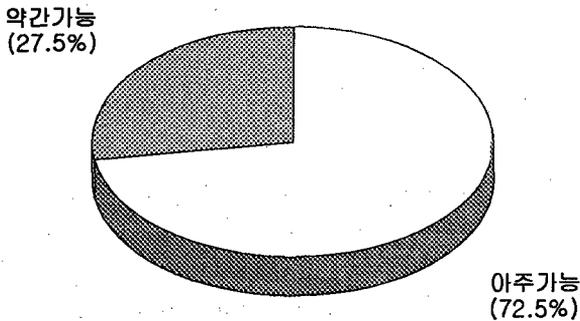
예상사태	가중빈도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중심지로 부상	86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74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변수	63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각축	56

1)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중심지로 부상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와 아·태지역의 세계경제 중심부 부상으로 통일후 한반도는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물류기지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은 무역·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며,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세계경제문제에 대한 주요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29명(72.5%)이 아주가능, 11명(27.5%)이 약간가능이라고 답하여 양국 전문가 전원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6)했다<그림 4-1>.

<그림 4-1>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중심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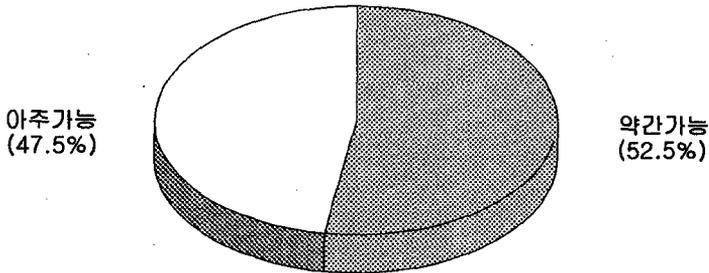


2)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한반도 통일은 분단으로 중단되었던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기능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북방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와 안보 등의 분야에서 동북아에서 중요한 지정·지경학적 역할을 해왔다. 통일 이후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을 회복할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1명(52.5%)이 아주가능, 나머지 19명(47.5%)이 약간가능으로 응답하여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특성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74)하고 있다<그림 4-2>.

<그림 4-2>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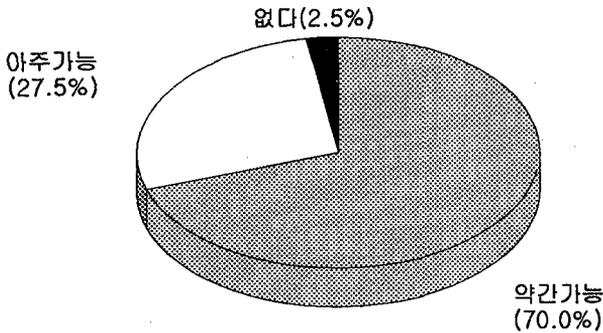


3)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변수

통일한국은 미·중·일·러 4강간 지역내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소 중심의 세력구조가 탈냉전으로 와해되면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중심이 유럽에서 동북아로 옮겨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일한국이 역내 질서형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한국은 인구 세계 12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 잠재적 군사대국 등 아·태지역 강대국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어서 역내 국제질서 및 역학관계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한국이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서 중대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1명(27.5%)이 아주가능, 28명(70%)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대답하여 비교적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63)하고 있다<그림 4-3>.

<그림 4-3>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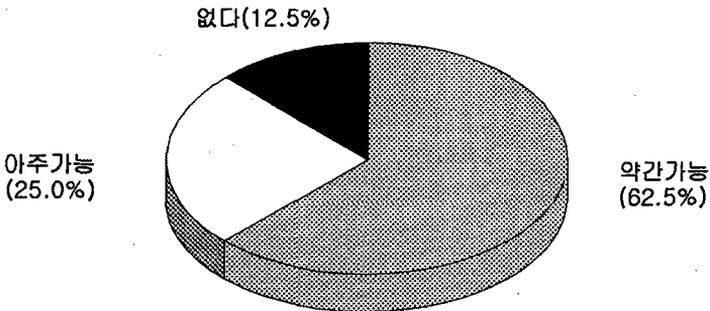
4)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대륙세력(중·러) 대 해양세력(미·일)의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미·일의 견제, 러시아의 대미 중국카드, 일본중시의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또다시 구한말과 같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해이다. 특히 공업화한 한국이 어느 편과 우방이 되는가에 따라 동북아 균형이 결정될 것이므로 양 세력권은 서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양대세력 각축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0명(25%)이 아주가능, 25명(62.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87.5%가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반면, 5명(12.5%)은 통일한국이 19세기말과 같은 약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 양세력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56)했다<그림 4-4>.

<그림 4-4>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2. 동북아지역 안보상황

통일한국 등장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사태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북한 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해군력 증강 경쟁 등 13개 사태로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4-2>.

한반도의 통일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며 해상로 확보를 구실로 전진방어정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역내에서는 미군의 철수에 따라 발생할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해군력 증강경쟁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내 안보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간에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일한국의 국력과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통일한국이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통일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동북아가 새로운 5강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역내국가들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나 이것이 지역 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안될 것이며,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의 결속으로 신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미·일 동맹체제가 약화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동북아지역 안보관련 예상사태중 가중빈도 50이상의 사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동북아지역 안보관련 주요 예상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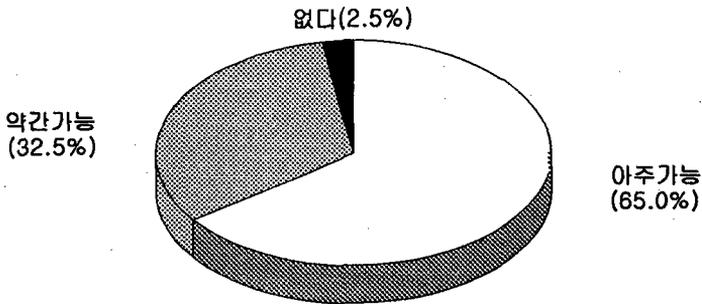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81	U4
북한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68	U1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61	U3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60	U3
해군력 증강 경쟁	58	U4
동북아 5강 체제화	58	U6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 혼란	54	U5
미·중간 관계 악화	49	U3
미군 철수에 따른 역내 군비 경쟁 심화	46	U5
해상로확보 구실로 일본의 전진방어 정책 선언	43	U3
영토분쟁으로 지역안보 위협	38	U3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 관계 결속	28	U5
미·일 동맹체제 약화	24	U2

1)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한반도를 통한 물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온 북한의 소멸로 지역내 물류흐름이 원활해지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 등으로 지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가 블록화 경향을 띠면서 통일한국 등장을 계기로 이 지역에도 경제블록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 등장 이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6명(65%)이 아주가능, 13명(32.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가중빈도: 81)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4-5>.

<그림 4-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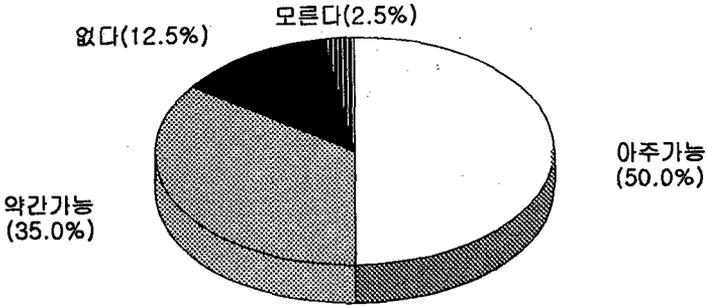


2) 북한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수출, 생화학 무기 대량 보유 등으로 초래된 동북아지역의 안보불안요인이 통일한국의 핵투명성 보장과 생화학 무기 파기로 해소됨에 따라 지역안보 불안요인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호전성으로 인하여 지속된 한반도의 긴장이 종식됨에 따라 동북아는 안보불안정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통일에 따른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0명(50%)이 아주가능, 14명(3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태로 전망(가중빈도: 68)되었다. 한편 한국전문가 4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60%가 아주가능이라고 답하여 미국전문가들이 한국전문가들보다 통일한국의 등장이 지역안보정착에 더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4-6>.

<그림 4-6> 북한소멸로 동북아지역 안보불안요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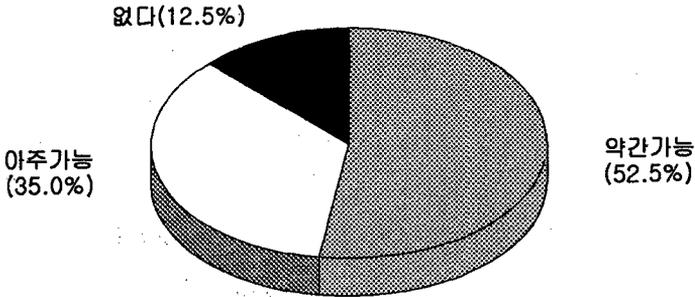


3)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한반도 통일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내세워 북한지역 경제재건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개발에 기술·자본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하여 지역내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통일한국의 등장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소로 발생할 힘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메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 군비경쟁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

통일한국 등장 이후 지역내 일본의 영향력 강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4명(3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61)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4-7>.

<그림 4-7> 일본의 역내 영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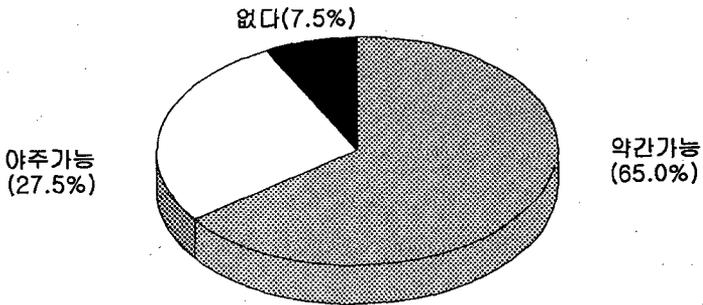
4)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통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 안보협력 체제 구축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 등장 이후 역내국가들은 해상로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 경쟁을 하는 등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한반도에 독점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일·러·중 등 5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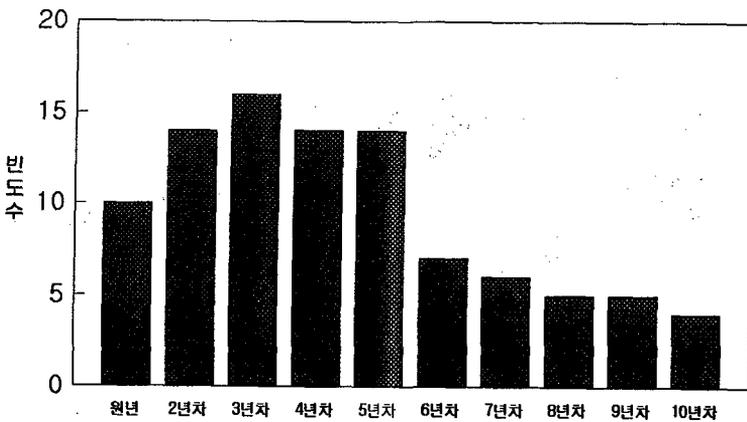
통일한국 등장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1명(27.5%)이 아주가능, 26명(6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고 응답하여 92.5%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0)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 4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1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전문가들이 미국전문가보다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그림 4-8>하고 있다. 시기적

으로는 통일 이후 3년 내지 5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9>.

<그림 4-8>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그림 4-9>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 급진전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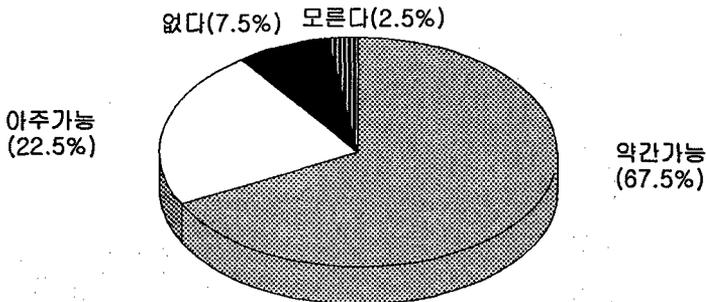


5) 해군력 증강 경쟁

한반도 통일로 인한 한·미 안보체제 필요성 약화로 주한미군이 대 폭 감축되면서 생겨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통일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등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의 경제력 회복에 따른 극동지역 군사력, 특히 해군력 증대와 아울러 통일한국의 해상로 보호 필요성에 따른 해군력 증강으로 동북아각국은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해군력 증강 경쟁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9명(22.5%)이 아주가능, 27명(67.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58)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 내지 5년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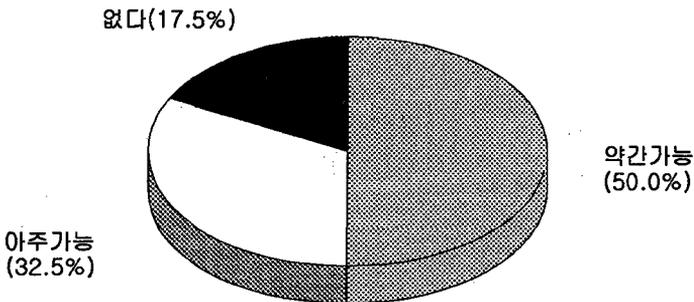
<그림 4-10> 해군력 증강 경쟁



6) 동북아 5강 체제화

통일한국은 면적은 세계 78위가 되나 인구가 세계 12위, 국민총생산은 세계 11위,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진입, 잠재적 군사대국 등의 요소들을 감안할 때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강대국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동북아는 지금까지의 4강체제에서 5강체제로 안보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한국이 5강체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3명(32.5%)이 아주가능, 20명(50%)이 약간가능, 7명(17.5%)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82.5%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58)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의 2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4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전문가들이 한국전문가보다 통일한국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6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4-11>.

<그림 4-11> 동북아 5강 체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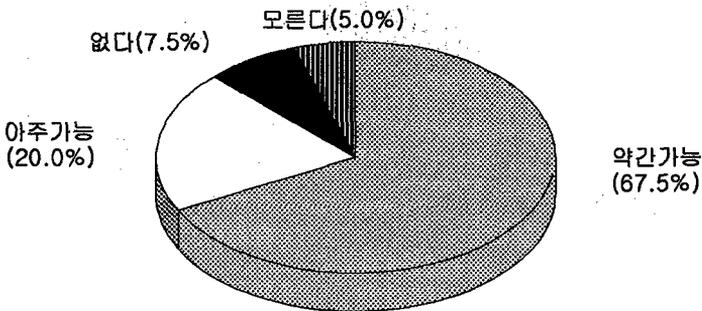


7)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혼란

사회주의권인 북한의 소멸과 민주화된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그동안 시장경제 이행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진 중국인들이 사회주의 통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할 것을 갈망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주화 요구 집회는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열리다 마침내 제2의 천안문사태가 발생하여 민주화 요구가 전 중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이 민주화세력과 수구세력으로 양분되는 내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한국 등장 이후 중국의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어 내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8명(20%)이 아주가능, 27명(67.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 2명(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87.5%가 민주화된 통일한국이 중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54)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후 3년 내지 5년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4-12>.

<그림 4-12> 중국의 민주화 요구로 내부혼란



3.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

한·미 전문가 40명이 예견한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예상사태는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한·미 방위조약 개정, 한·러 경제협력 강화, 한·일간 해양경계선 마찰 심화 등 15개 사태이다<표 4-3>.

<표 4-3> 통일한국과 주변 4국과의 관계 관련 예상사태

예상사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94	U3
한·미 방위조약 개정	84	U2
한·러 경제협력 강화	75	U2
한·러 관계 개선	64	U3
한·일간 해양경계선 마찰 심화	50	U3
한·미 동맹 강화	45	U1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41	U3
한·일 우호관계 강화	40	U2
한·중 군사 우호관계 강화	36	U3
한·중 국경 분쟁	34	U3
한·일 관계 악화	34	U3
한·미 관계 소원화	31	U2
한·중 외교적 갈등 심화	30	U3
북한 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한·중 갈등	29	U2
시할린 동포 문제로 마찰	21	U3

통일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북방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례하여 한·중, 한·러관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 위협의 소멸로 한·미 방위조약 개정이 논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관계가 중속관계가

아닌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우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미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간에는 해양경계선을 두고 다소 마찰이 예상되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중간에는 동북 3성의 조선족문제로 다소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가 양국간의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한 한·중간에 국경 분쟁이나 북한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갈등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러간에도 사할린동포의 문제로 다소 마찰은 있을 수 있으나 외교적으로 무난히 해결될 것이며 이 문제로 한·러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한국과 주변 4국과의 관계 관련 예상사태중 가중빈도 50이상의 사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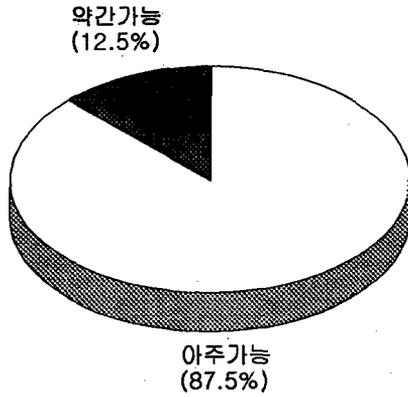
1)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통일로 인해 북방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통일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동북3성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배후시장, 자원공급원 및 인력진출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도 통일한국과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어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5명(87.5%)이 아주가능, 5명(12.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상사태로 선정하고 있다(가중빈도: 94).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지고 있다<그림 4-13>.

<그림 4-13> 한·중 경제교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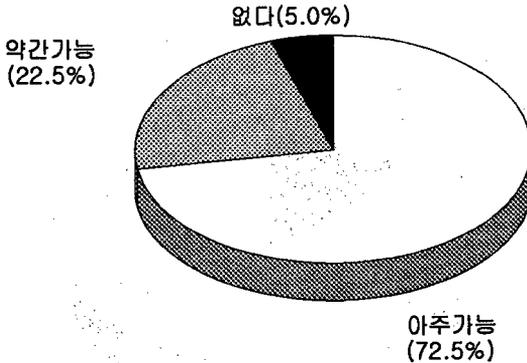


2) 한·미 방위조약 개정

한·미동맹의 주적인 북한이 사라짐에 따라 한·미 동맹체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제기되고 한·미 방위조약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개정되면서 한·미 동맹관계는 미·일 동맹식의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이후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9명(72.5%)이 아주가능, 9명(22.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가중빈도: 84)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4-14>.

<그림 4-14> 한·미 방위조약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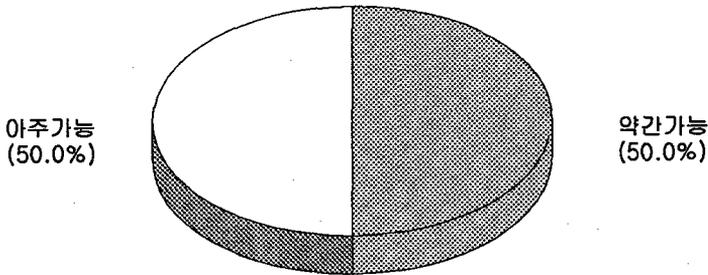


3) 한·러 경제협력 강화

통일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특히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이라는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기업들은 통일 이후 지리적으로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대러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러시아도 자국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자국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자본 및 상품화기술을 접목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므로 한·러 양국간에는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0명(50%)이 아주가능, 20명(50%)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전원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가중빈도: 75)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15>.

<그림 4-15> 한·러 경제협력 강화



4) 한·러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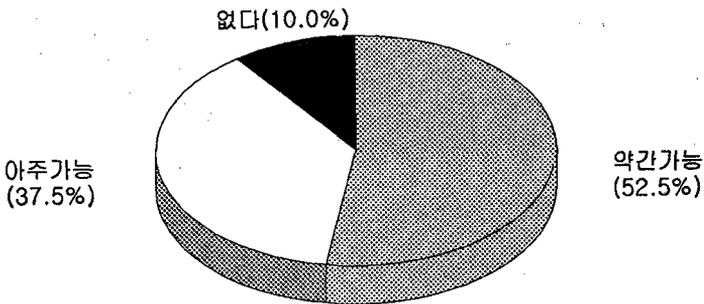
통일한국은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함께 자주외교노선 강화의 일환으로 대륙외교를 강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러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므로 러시아와 선린우호관계를 갖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의 한·러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5명(37.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4명(10%)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64)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전문가 55%가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전문가 2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러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전문가들보다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16>.

<그림 4-16> 한·러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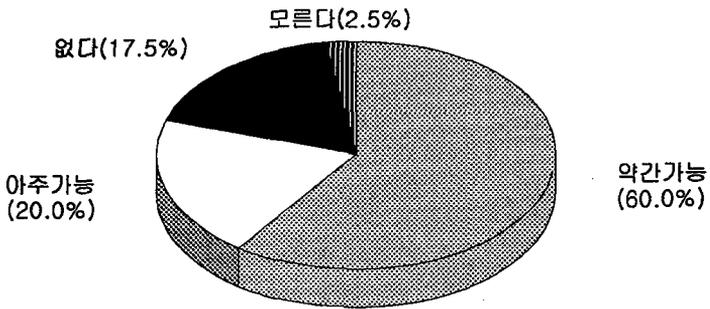
5) 한·일간 해양경계선 마찰 심화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통일한국 등장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일간의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은 독도영유권을 포함해서 일본과의 해양경계선 설정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마찰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8명(20%)이 아주가능, 24명(60%)이 약간가능, 7명(17.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80%이상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가중빈도는 50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는 통일 이전에 한·일

간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17>.

<그림 4-17> 한·일간 해양경계선 마찰 심화



V. 분야별 주요 예상사태

본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전문가 40명이 제시한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예상사태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예상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의 분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정치분야

통일 한국의 정치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사태는 우상화 상징물 철거, 정치집단 다양화, 총선실시, 법·제도 통합 및 통일헌법 제정,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등 16개 항목이 예상되고 있다 <표 5-1>.

<표 5-1> 정치관련 주요 예상사태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우상화 상징물 철거	91	U1
정치집단 다양화	89	U1
총선실시	80	U1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 제정	78	U2
북한지도층 망명	76	U1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66	U1
대통령중심제	66	U1
휴전선 통제	55	U1
내각책임제	54	U1
좌파정당 활성화	54	U3
과거청산	54	U3
정치혼란	51	U1
북한지도층 저항	48	U1
신수도 선정	29	U1
주변 4국의 북한지역관리 참여	26	U1
미국식 연방제	21	U1

통일한국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상징물을 철거하고 과거 청산을 통해 공산잔재를 일소하면서, 법·제도를 통합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총선을 실시하여 신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체제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중 어느 체제가 신정부에 적합한지를 놓고 각 정파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적한 통일과업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가 더 선호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한편 구복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집단이 다양화되고 보·혁갈등에 따른 정치혼란이 통일초기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복한 지도층 인사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국외망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체사상과 김일성 우상화를 맹신하는 일부 골수 노동당원들은 산간 등지에 은신하면서 저항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통일한국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조기에 수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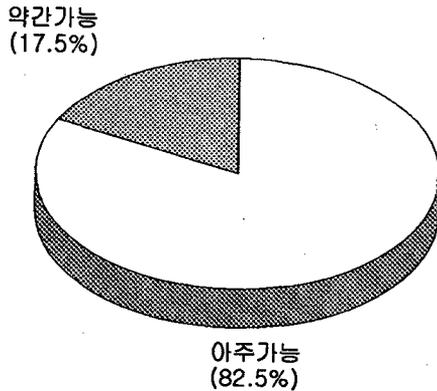
통일 이후 휴전선을 통제할 것인지는 통일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민감한 사안중의 하나이며, 북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을 막지 못하면 남한지역 대도시들의 치안이 마비되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신수도 선정 가능성에 대하여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통일초기 주변 4국의 북한지역 관리참여는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전문가들의 견해이다. 50이상 가중빈도를 받은 예상사태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상화 상징물 철거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정치분야 주요사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받은 항목은 이상화 상징물 철거이다. 통일과정에서 구북한 공산잔재 청산이 일부 이루어질 것이나 통일 후에도 구북한지역 주민과 남한 지역 일부 보수세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 동상 및 주체사상탑 등 이상화 상징물 철거작업이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7명(17.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중빈도: 91),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5-1>.

한편 한국전문가 20명(100%)이 모두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는 13명(65%)만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전문가들이 이상화 상징물 철거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이상화 상징물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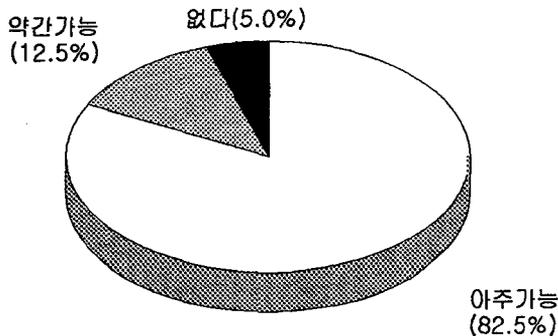


2) 정치집단 다양화

통일이 되면 좌파이념을 배제할 논리가 없어지는 데다 구북한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 특히 늘어난 빈민층의 복지를 요구하는 좌파정당, 사회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정치집단이 다양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남한지역의 각 정당들이 북한지역 유력인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서 남북지역의 정치세력간 연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등의 교류활성화는 실질적인 남북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5명(12.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대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가중빈도: 89), 또한 한국전문가 17명(85%)과 미국전문가 16명(80%)이 아주가능이라고 각각 응답하여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집단 다양화에 대해서는 양국전문가가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후 3년 내지 4년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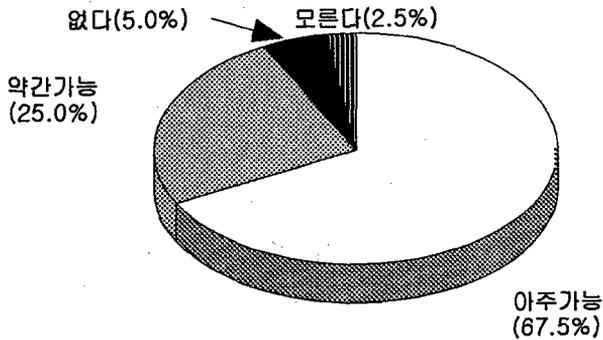
<그림 5-2> 정치집단 다양화



3) 총선실시

통일한국은 통일헌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후 새로 제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신정부 구성을 위하여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대통령제의 경우 대선과 총선 별도 실시). 통일 이후 총선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7명(67.5%)이 아주가능, 10명(25%)이 약간가능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2명(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답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직후 총선실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하고 있다(가중빈도 80).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 16명(29.6%), 통일 다음해가 15명(27.8%)으로 전문가 57.4%가 통일 직후나 1년후를 총선실시 시기로 보고 있다<그림 5-3>.

<그림 5-3> 총선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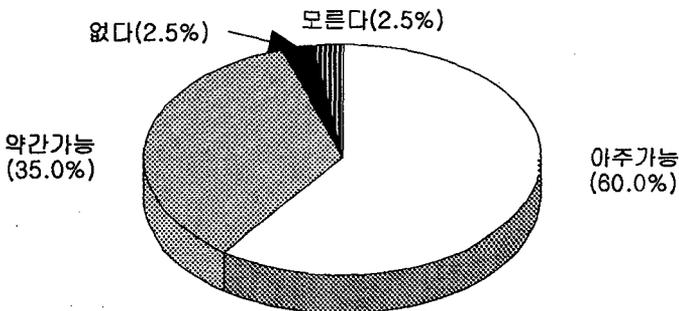
4)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 제정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로서 통일국가체제에 맞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통일한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간 상이한 법 및 제도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는 작업은 모든 일에 앞서 시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민투표에도 부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40명의 한·미 전문가 중 24명(60%)이 아주가능, 14명(3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가중빈도 78),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중 한국전문가가 15명(75%)인 반면, 미국전문가는 9명(45%)으로 나타나 법·제도 통합과 통일헌법 제정에 대하여 한국전문가가 더 발생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5-4>.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나 이듬해에 남북한의 법·제도가 통합되고 통일헌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5-4> 법·제도 통합, 통일헌법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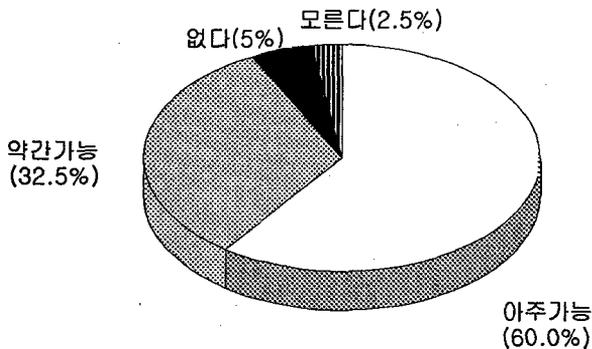


5) 북한지도층 망명

통일 이후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한 권력층을 단죄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구북한 일부지도층 인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북한의 당·군·정 고위관리들의 국외망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체제 유지에 종사했던 당간부 및 열성활동자(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군간부 등) 가족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피신할 것이며, 일부는 해상으로 도피 boat people이 되어 망명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들의 숫자는 최소한 수만명에 이를 것이며 통일 직전부터 북한지도층의 망명은 시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4명(60%)이 아주가능, 13명(32.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중빈도: 76),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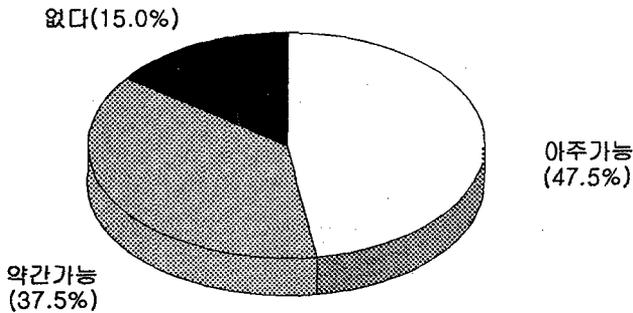
<그림 5-5> 북한지도층 망명



6)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통일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주요 정치과제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 체제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통일 직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내각책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집단간에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9명(47.5%)이 아주가능, 15명(37.5%)이 약간가능, 6명(15%)이 없다라고 응답하여(가중빈도: 66)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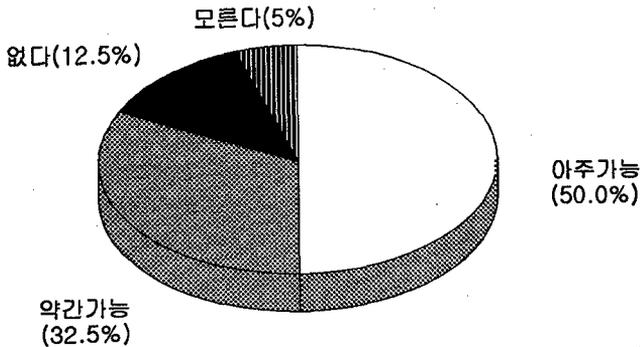
<그림 5-6> 통일한국체제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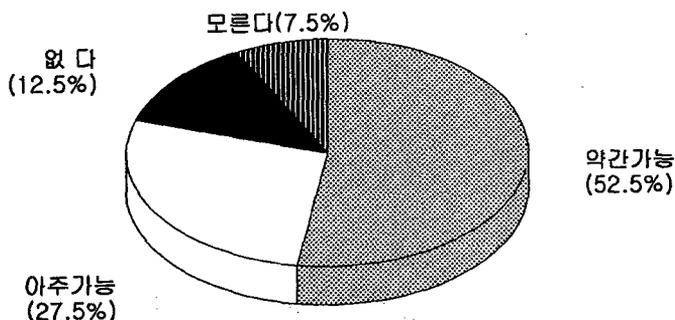
통합작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통령중심제가 내각책임제보다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통령중심제 채택여부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0명(50%)이 아주가능, 13명(32.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 2명(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6)한 반면<그림 5-7>,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40명중 11명(27.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 3명(7.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가중빈도: 54) 대통령중심제에 비하여 채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8>.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미국식 연방제에 대해서는 한·미 전문가 40명중 4명(10%)이 아주가능, 9명(22.5%)이 약간가능이라고 대답한 반면, 25명(62.5%)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미국식 연방제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가중빈도: 21).

<그림 5-7> 대통령 중심제



<그림 5-8> 내각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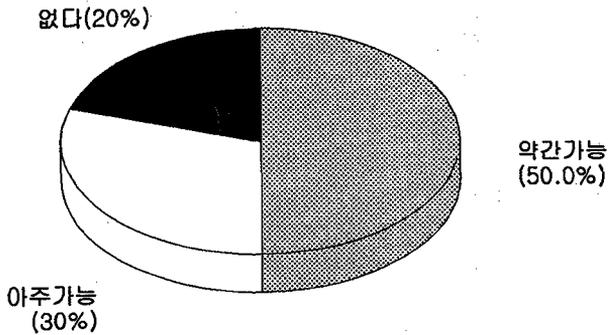
7) 휴전선 통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대량 남한이주를 막기 위하여 휴전선을 통제하고 남북 양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통치하는 문제는 통일한국정부 부가 직면하게 될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전문가들은 휴전선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식량난으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는 난민들이 대량 남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휴전선 통제와 함께 구북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식량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 인구대이동으로 치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 통치한다고 해도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은 즉시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이후 휴전선 통제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전문가 40명중 12명(30%)이 아주가능, 20명(50%)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 80%의 전문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반면, 8명(20%)의 전문가는 통일 이후에 휴전

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한이주를 간절히 원하는 북한주민을 물리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가중빈도: 55). 그리고 만약 휴전선을 통제한다면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5-9>.

<그림 5-9> 휴전선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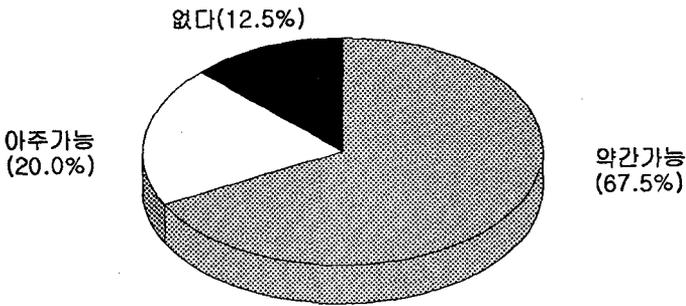


8) 좌파정당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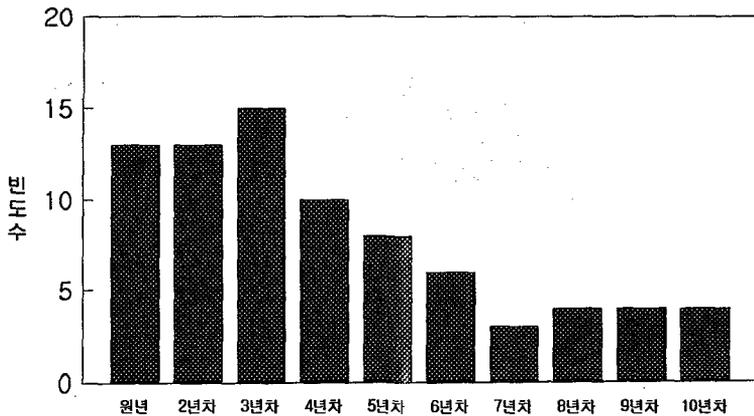
한국내 지배적 이념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음을 감안,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당 성격의 사회주의정당의 출현이 예견된다. 특히 통일이 되면 이데올로기 논쟁을 제한할 논리가 없어짐에 따라 보·혁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주의노선을 주장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고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가진 북한주민과 통일로 인해 늘어난 빈민층의 고된 복지를 요구하면서 당세를 넓혀갈 것이다. 통일 이후 좌파정당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

중 8명(20%)이 아주가능, 27명(67.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54)되고 있으며<그림 5-10>,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부터 3년까지 발생빈도가 높다가 그 이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11).

<그림 5-10> 좌파정당 활성화



<그림 5-11> 좌파정당 활성화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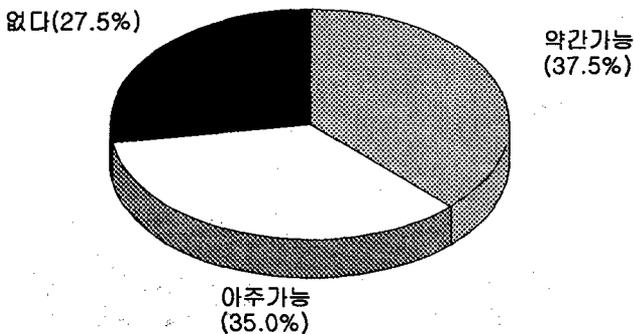


9) 과거청산

통일한국은 구복한 공산잔재 청산을 두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주민과 남측 일부 우익보수집단은 과거 악질 공산당 간부의 처벌과 함께 한국전쟁 전범자 처리와 해방후와 6.25전후 월남인 가족들에게 해악질을 한 자의 의법처단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한편 남측에서는 북한지배층의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가? 한국전쟁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가를 두고 정치집단간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청산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4명(35%)이 아주가능, 15명(37.5%)이 약간가능으로 응답, 72.5%가 어떤 형태로든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반면, 11명(27.5%)은 순조로운 남북통합을 위해서 구복한 지도층의 처벌과 같은 과거청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54)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약 3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12>.

<그림 5-12> 과거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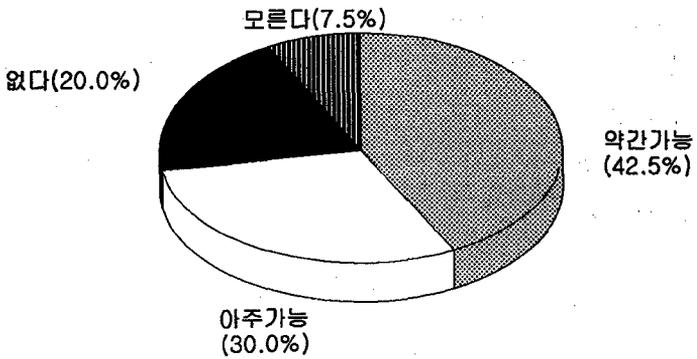


10) 정치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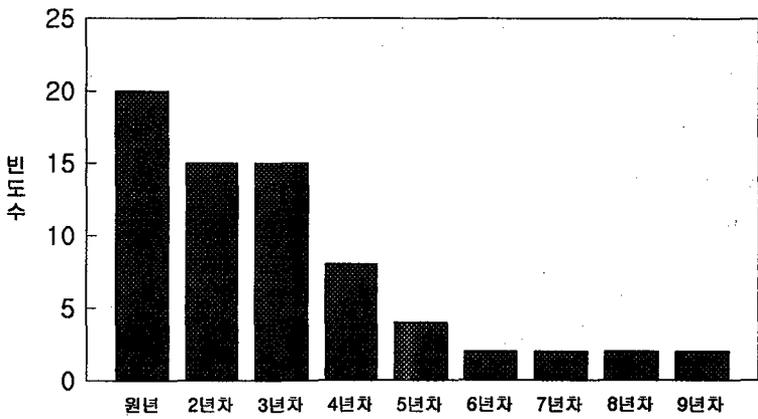
통일한국은 통일 직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북한지역 정치집단 및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적 정치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지역주민들은 통일 이후 수년이 지나도 지역의 낙후성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아 정치적 불만이 표출될 것이며, 과거 공산정권 담당자들이 이러한 주민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면서 사회주의정당이 난립하고 보·혁갈등이 가시화되는 등 해방 직후와 같은 정치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통일한국에서의 정치혼란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 중 12명(30%)이 아주가능, 17명(42.5%)이 약간가능, 8명(20%)이 없다, 3명(7.5%)이 모른다고 대답하여 통일 직후 정치적 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가중빈도: 51)<그림 5-13>.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뚜렷한데 해방 이후 정치혼란을 익히 알고 있는 한국전문가들은 60%가 아주가능, 40%가 약간가능으로 정치혼란 발생가능성을 높게 예상한 반면, 미국전문가들은 약간가능 53%, 없다 47%로 통일 이후 정치혼란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3년 이후 정치혼란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5-14>.

<그림 5-13> 정치혼란



<그림 5-14> 정치혼란 발생가능년도 빈도



2. 경제분야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40명이 통일한국에서 일어날 주요 예상사태를 분류하는 큰 범주의 두번째로 경제분야를 들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제분야에 관련된 예상사태는 18개이다. 이들중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남한기업 북한지역 진출 활성화, 화폐통합,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재정적자 심화를 비롯하여 북한주민 대량실업, 토지소유권 분쟁 등이 가중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부족으로 인한 물가폭등이나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는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표 5-2>. 이중 가중빈도 50 이상으로 나타난 예상사태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경제관련 주요 예상사태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95	U3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94	U2
화폐통합	90	U1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88	U2
북한의 대외채권·채무 계승	85	U1
재정적자 심화	85	U2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84	U2
세금부담 급증	83	U2
북한주민 대량실업	81	U1
북한지역 땅투기	79	U2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75	U1
외국인 투자 증대	74	U3
토지소유권 분쟁	68	U1
두만강지역 본격 개발	65	U3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64	U1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59	U2
물가폭등	54	U2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	46	U3

1)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경제분야 예상사태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한·미 전문가들은 국토종합계획 추진을 전망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민족공동의 삶의 터전으로서 국제화, 지역화 등의 새로운 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발전축으로 종합 개발되어질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의주-평양-서울-광주를 잇는 서해안축과 서울-원산-청진을 잇는 동북축 그리고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잇는 동남축이 K자형으로 연결되며, 동북축은 시베리아로, 서해안축은 중국의 동북부를 거쳐 대륙으로 이어지도록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축은 북으로는 중국, 동북으로는 러시아, 동남으로는 일본과 미국,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뻗어가 세계적으로 응비하는 통일한국 발전의 진취적 틀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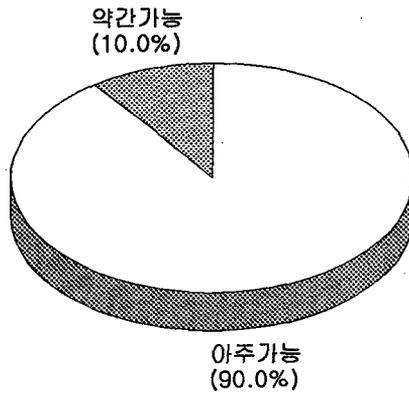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6명(90%)이 아주가능, 4명(10%)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경제분야 주요 예상사태 중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전망(가중빈도: 95)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15>.

2)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값싼 임금 및 지가 그리고 대중국, 러시아 진출의 용이한 잇점 때문에 남한기업의 대북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울러 노동집약산업과 공해산업의 북한이전 등 산업재배치도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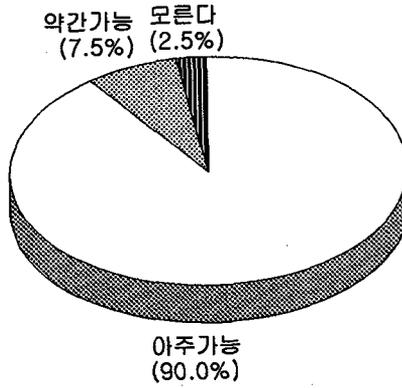
하계 이루어지면서 북한경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지역의 저발전단계로 인해 형성된 남북한지역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북한지역의 발전으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명실공히 남북경제 통합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림 5-15>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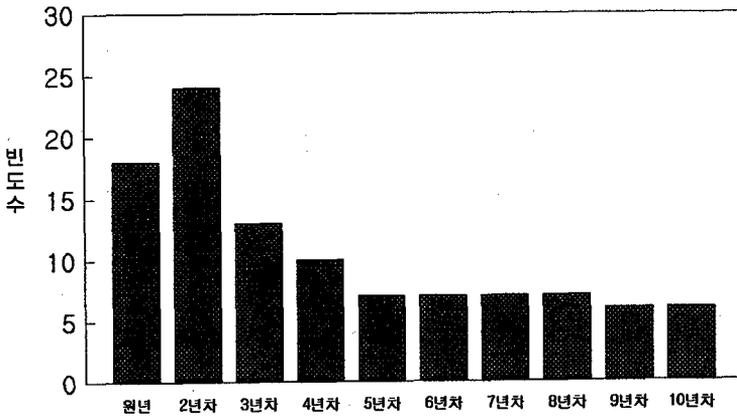


통일 이후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활성화에 대해 한·미 전문가 40명 중 36명(90%)이 아주가능, 3명(7.5%)이 약간가능,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양국 전문가들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로 예상(가중빈도: 94)하고 있다<그림 5-16>.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2년간 대북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남한기업의 대북진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열기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17>.

<그림 5-16>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그림 5-17> 남한기업 북한진출 활성화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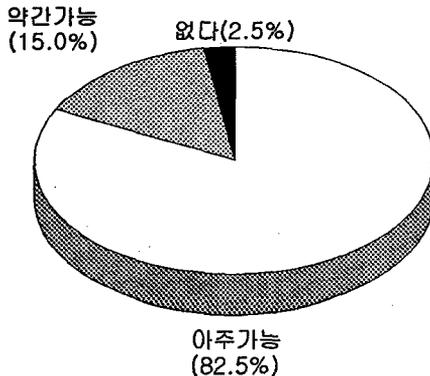


3) 화폐통합

통일 이후 남북한 화폐통합 없이는 경제행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통일과 동시에 화폐통합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통합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되나 독일의 화폐통합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정비율로 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중시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합비율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나 화폐가치 폭락 및 통화증발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경제적 측면이 중시되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들간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답변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90)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나 이듬해까지는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18>.

<그림 5-18> 화폐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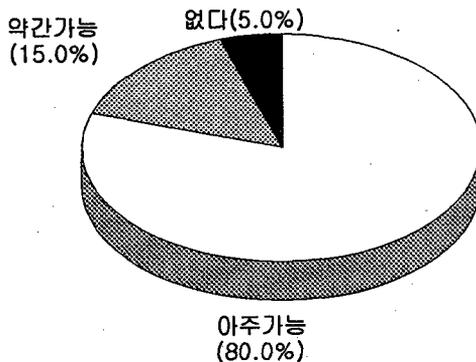


4)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과 동시에 통일한국정부는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같은 과도기적 기구를 설립하고 북한의 국영 및 공기업, 공장기업소, 집단농장 등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북한공장기업소들의 대량파산이 예상되며, 북한지역 산업시설의 전면재건설이 요구되나 재원부족으로 북한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2명(80%)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8)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전문가의 77%가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5-19>.

<그림 5-19> 북한기업 민영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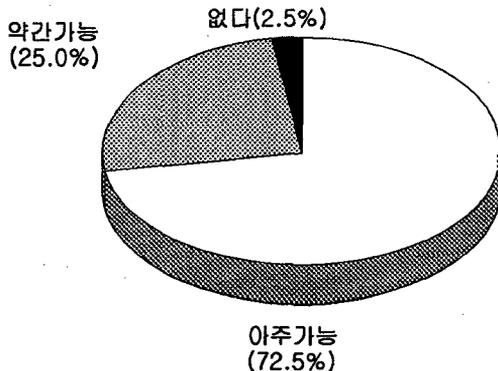


5) 북한의 대외채권·채무 승계

통일한국이 북한의 대외채권·채무를 승계하는 문제는 통일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독일의 동독채무 승계에서 보듯이 한국도 북한채권·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국제금융기구(IMF, ADB, WB) 등에 북한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유관국 기구들의 채무이행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한국은 국제법상 원칙에 입각, 헌법체제의 범위 내에서 북한의 국제의무를 승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9명(72.5%)이 아주가능, 10명(2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통일한국의 북한 대외채권·채무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85)하고 있으며, 한국전문가 80%와 미국전문가 65%가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하여 한국전문가가 미국전문가보다 통일한국의 북한 채무승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전문가 78%가 통일 3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20>.

<그림 5-20> 북한의 대외채권·채무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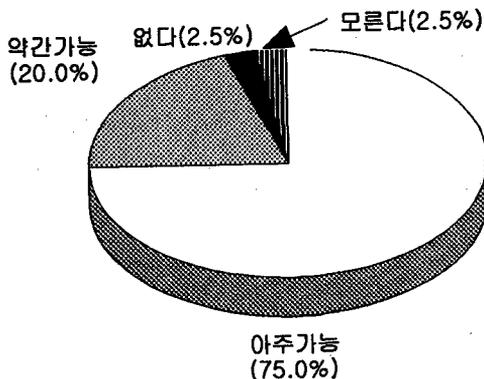


6) 재정적자 심화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서 생필품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및 행정, 경제복구와 아울러 북한지역주민들의 민주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재교육 등 소위 통일비용을 위해서 매년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 재건 및 지원비용의 많은 부분이 국가 예산을 통해 조달되어야 할 경우, 이 과정에서 비용부담의 주체인 남한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정치권이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악용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자 심화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0명(75%)이 아주가능, 8명(20%)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통일한국정부가 통일비용부담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가중빈도: 85)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5년차까지 높은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21>.

<그림 5-21> 재정적자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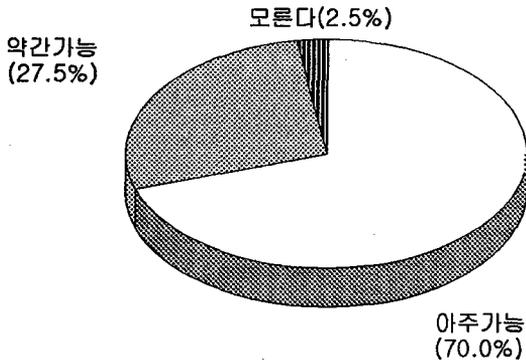


7)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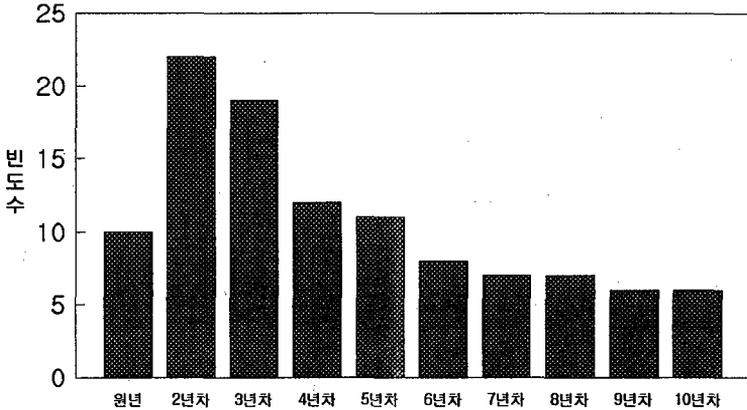
통일 이후 낙후된 북한지역 산업기반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SOC 투자가 장기적 국가정책과제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지역의 철도, 항만,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통일한국의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8명(70%)이 아주가능, 11명(27.5%)이 약간가능, 1명(2.5%)이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것(가중빈도: 84)으로 보고 있으며<그림 5-22>,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장기간 대북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23>.

<그림 5-22>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그림 5-23> 북한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 활성화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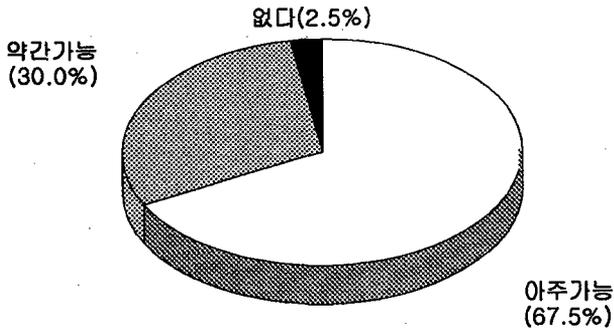


8) 세금부담 급증

북한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북한지역 개발투자를 위한 재원이 대부분 남한지역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한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북한지역주민의 유입에 따른 노동인구 증가에 따라 임금이 전반적으로 내려가 남한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서독의 경우 인구가 4:1인 반면 남북한은 2:1이며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동서독의 차이보다 더 큼에 따라 한국국민이 서독국민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일 이후 세금부담 급증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7명(67.5%)이 아주가능, 12명(30%)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83)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간 지속되다 그 이후에는 세금부담이 조금씩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5-24>.

<그림 5-24> 세금부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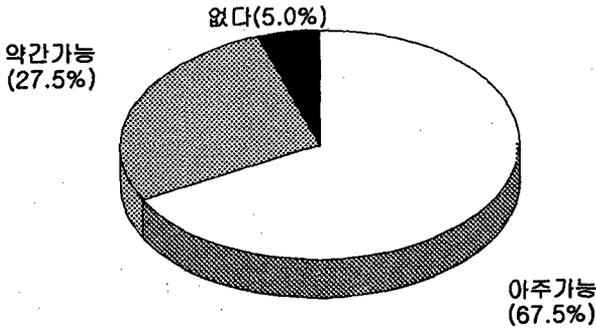


9) 북한주민 대량실업

통일후 경쟁력이 없는 북한지역 공장기업소의 대량도산과 이에 따른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북한의 체제유지기관인 노동당,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100만명에 이르는 군대가 해체되면서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전혀 생산능력이 없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북한지역 실업자들은 단순노동자로서 활용하거나 재교육시켜 일부를 생산현장에 재투입하더라도 대량실업사태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주민의 대량실업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7명(67.5%)이 아주가능, 11명(27.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답변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대량실업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가중빈도: 81),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무리없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내지 4년이 고비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25>.

<그림 5-25> 북한주민 대량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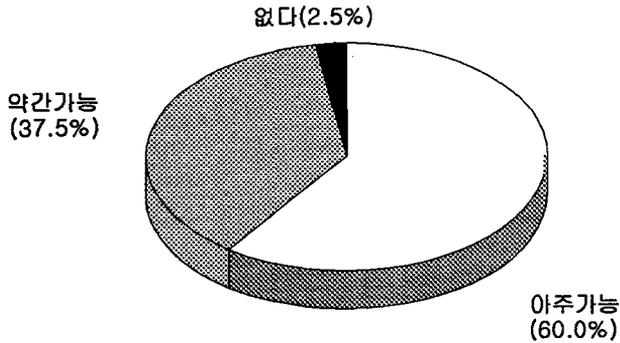


10) 북한지역 땅투기

북한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한지역의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려 들면서 북한지역토지를 선점하기 위한 땅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일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확대로 산업지역과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 급격한 지가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지역 땅투기에 대하여 40명의 한·미 전문가중 24명(60%)이 아주가능, 15명(37.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투기가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79)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하여 한국전문가 5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7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전문가가 한국전문가보다 남한 지역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한 북한지역 땅투기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5년차까지 땅투기 열풍이 불다 그 이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26>.

<그림 5-26> 북한지역 땅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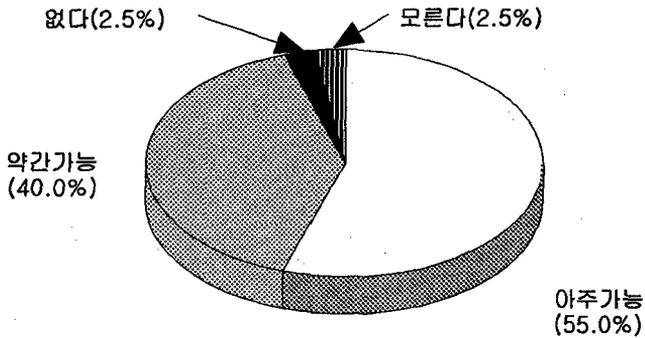


11)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경제붕괴, 물자부족, 대량실업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보호 대책이 급선무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일한국정부가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장알선, 주택보급, 복지 등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소규모의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북한군 출신이 이 소요에 가세할 경우 무력사태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남한지역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을 둘러싼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2명(55%)이 아주가능, 16명(40%)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75)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간이 고비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27>.

<그림 5-27> 북한주민 생활보호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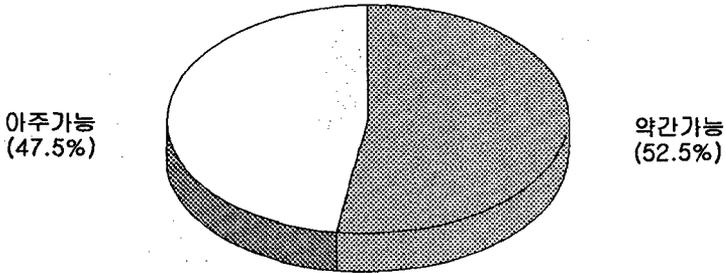


12) 외국인 투자 증대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7천만 인구의 거대시장이 형성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일한국의 잠재시장성을 인지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값싼 지가와 노동력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호조건이 될 것이며, 통일한국정부의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와 비례해서 투자분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외국인 투자 증대에 대해서 한·미 전문가 40명중 19명(47.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전원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중빈도: 74). 한편 한국전문가의 40%가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5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전문가가 한국전문가보다 외국인 투자 증대를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간 비교적 투자 증대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그 이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28>.

<그림 5-28> 외국인 투자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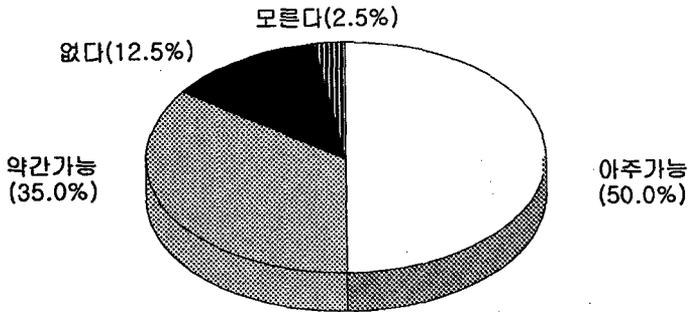


13) 토지소유권 분쟁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땅문서, 집문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재산권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지역 주민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협동농장과 국가소유의 토지 및 가옥사유화시 우선권을 요구하면서 텃밭 등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월남한 원소유자들과 북한지역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것이 법적인 기준에 의해 해결되더라도 양측 모두를 충족시킬 공통분모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0명(50%)이 아주가능, 14명(35%)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가중빈도: 68).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 내지 5년차까지 분쟁이 계속되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29>.

<그림 5-29> 토지소유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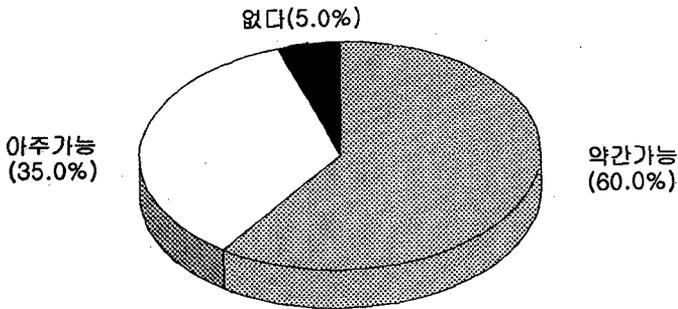


14) 두만강지역 본격 개발

두만강지역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이 접하고 있어 3국이 모두 개발에 관심을 갖는 지역이나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시설 부족과 제약요인들이 걸림돌이 되어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통일이 될 경우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줄어들고 통일한국정부의 북한지역 개발의지와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이 UNDP의 주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두만강지역 본격개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4명(35%)이 아주가능, 24명(60%)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65)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의 5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15%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통일 이후 두만강지역 본격개발에 대해서 한국전문가가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 내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30>.

<그림 5-30> 두만강지역 본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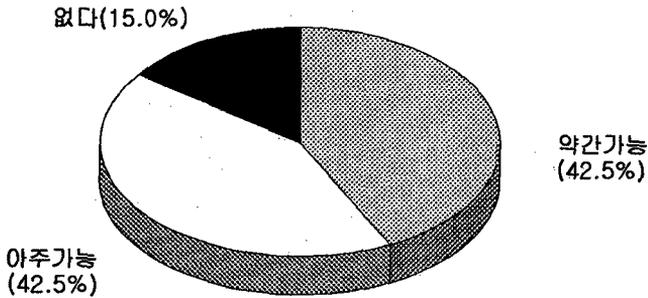


15)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개발 투자,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재원이 대부분 남한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데다 북한지역 주민들의 남한지역 유입에 따른 노동인구 증가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남한지역 주민들은 부담은 늘고 수입은 줄어 생활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7명(42.5%)이 아주가능, 17명(42.5%)이 약간가능, 6명(1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4)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의 5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3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생활수준의 일시적 하락가능성은 한국전문가들이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간 정도 지속되다 그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5-31>.

<그림 5-31> 생활수준 일시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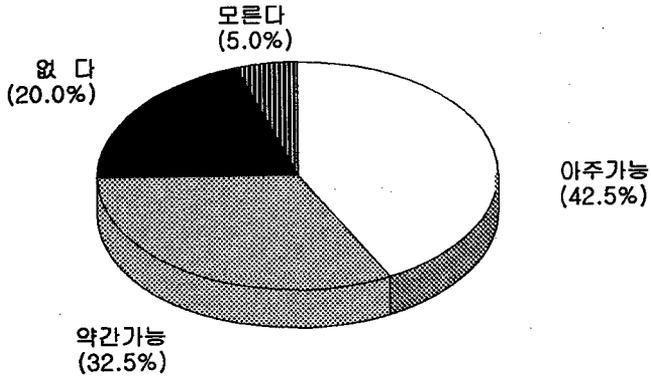


16)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통일한국은 과도한 통일비용 소요로 국내 자금조달이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통일비용 재원조달을 위하여 우방국과 IMF, IBRD, WB 등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하에 국제콘소시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콘소시움 구성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7명(42.5%)이 아주가능, 13명(32.5%)이 약간가능, 8명(20%)이 없다, 2명(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75%의 전문가가 구성가능성을 예상(가중빈도: 59)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문가의 55%가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3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하여 미국전문가들이 한국전문가들보다 통일한국의 통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콘소시움 구성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국제콘소시움이 구성된다면 통일원년이나 이듬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예상이다<그림 5-32>.

<그림 5-32> 통일비용 조달 국제콘소시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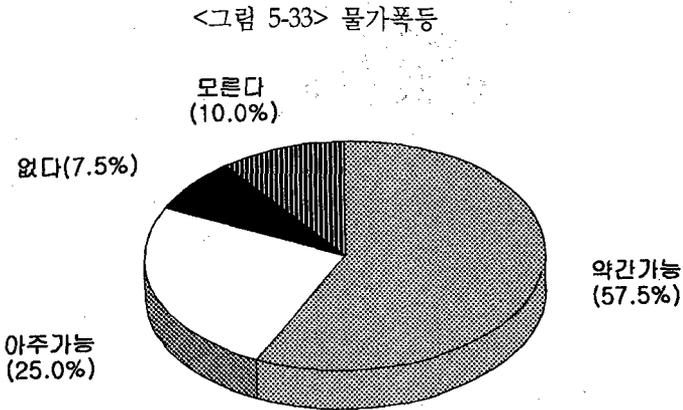


17) 물가폭등

통일 직후 북한 수복지구의 관리와 북한지역주민 구호를 위한 재정수요 폭발로 통화가 남발되고 이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통일 초기에는 남한지역의 생산품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을 긴급구호해야 하기 때문에 물자공급의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할 것이며 자원고갈로 경제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통일 직후 물가폭등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0명(25%)이 아주가능, 23명(57.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 4명(10%)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중빈도: 54). 한편 한국전문가의 45%가 아주가능이라고 답한 반면, 미국전문가의 5%만이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하여 미국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력과 무역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물자부족으로 물가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이

후 3년 내지 4년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33>.



3. 사회분야

한·미 전문가 40명이 예견하는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사회 관련 주요 예상사태는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북한주민의 열등의식, 남북한주민 갈등, 지역갈등 심화 등 11건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부분 오랫동안 사회주의제도에 익숙해온 북한지역 주민들이 민주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구가동으로 인하여 남한지역 대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가 다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치안공백 사태로 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산가족 상속문제는 다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나 이산가족 증혼문제는 통일시점에 가

서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3>. 사회관련 주요 예상사태중 가중빈도 50이상인 사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

<표 5-3> 사회관련 주요 예상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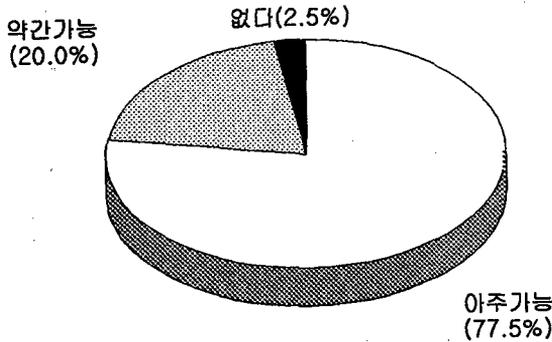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88	U1
북한지역주민의 열등의식	81	U1
남북한주민 갈등	78	U3
지역갈등 심화	75	U3
사회불안정	71	U1
범죄증가	70	U2
대규모 인구이동	63	U1
노사분규 심화	61	U3
이산가족 상속문제	58	U1
이산가족 중혼문제	39	U1
치안공백	35	U1

1)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한·미 전문가들이 선정한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사회관련 예상사태중 가장 가중빈도가 높은 사태가 북한주민의 부적응문제이다. 북한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타율적인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도모해야 하는 민주주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집단적·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부분의 탈북귀순동포들이 오랫동안 국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전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기업체제에 대한 적응훈련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기업들이 이들의 취업을 거부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주민의 민주사회 부적응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1명(77.5%)이 아주가능, 8명(20%)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88)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을 고비로 그 이후에는 차츰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림 5-34>.

<그림 5-34> 북한주민 부적응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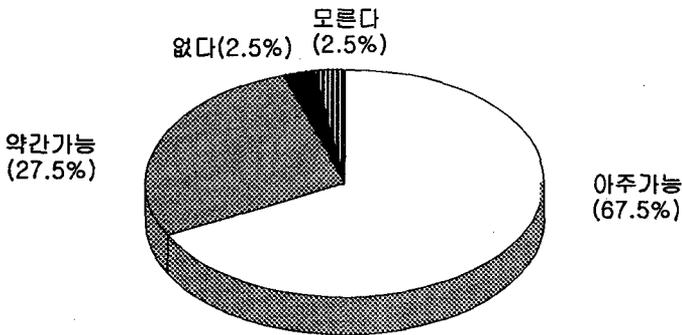
2) 북한지역주민의 열등의식

통독 이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지역 주민들은 패배의식, 자신감 상실, 새체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스로 이등 국민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지역 주민들간에 심리적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고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통일후 북한지역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더라도 남북간 경제력 차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박탈감과 열등의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7명(67.5%)이 아주가능, 11명(27.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1)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부터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35>.

<그림 5-35> 북한지역주민의 열등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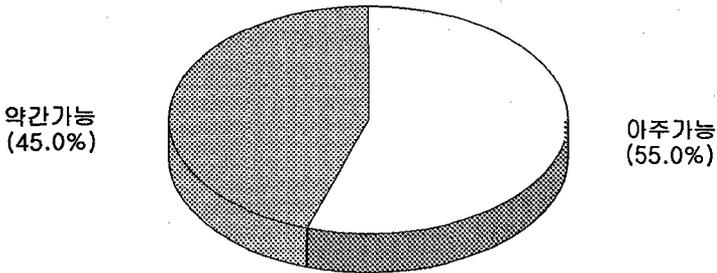
3) 남북한지역 주민 갈등

남북지역 주민들간에는 빈부의 격차와 반세기에 걸친 이념대립에 따른 상호 이해부족과 감정의 골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의 통일후 급진적 생활수준 향상 기대가 좌절될 경우 부(富)의 불균형에서 오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심화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제도 및 의식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신분, 지위의 불안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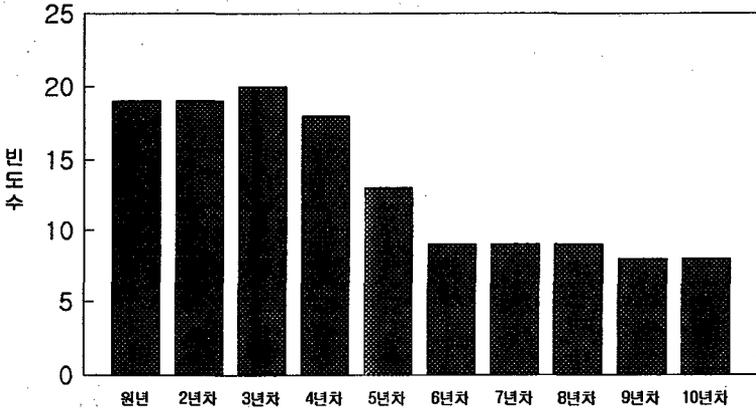
것이다. 한편 남한측 주민들은 북한지역 지원과 경제재건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불만이 팽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남북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2명(55%)이 아주가능, 18명(4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 전문가 전원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78)했으며<그림 5-36>,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간 정도 심화되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37>.

<그림 5-36> 남북한지역 주민 갈등



<그림 5-37> 남북한지역 주민 갈등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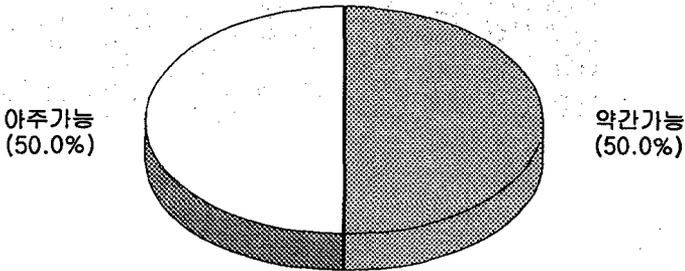
4) 지역갈등 심화

통일 이후에도 당분간 남북한간의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후유증으로 여러 문제가 등장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이유가 북한지역주민들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한지역 주민들은 북한지역 주민들을 거주장스럽게 여기게 되고 북한지역 주민들은 차별을 한다고 느끼게 되어 지역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한지역내의 지역주의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지역갈등까지 합해지면 통일한국의 지역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통일비용 부담으로 한국경제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지역갈등은 심각한 내부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갈등 심화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0명(50%)이 아주가능, 20명(50%)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전문가 전원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가중빈도: 75), 한국전문가 55%가

아주가능이라고 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4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전문가가 지역갈등 심화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5-38>.

<그림 5-38> 지역갈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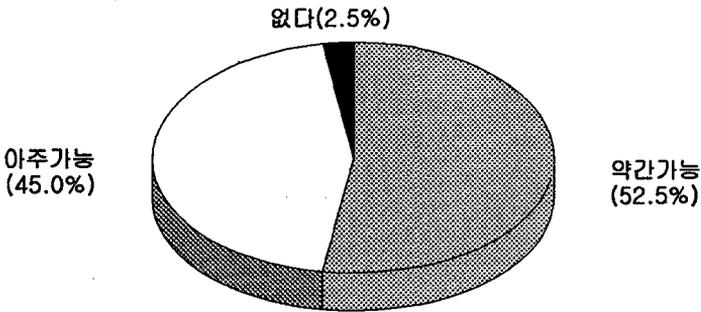
5) 사회불안정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재사회화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의 가치관 혼돈으로 아노미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북한지역내 보복살인, 범죄가 만연하고 아울러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아 대량남하하는 경우 서울을 위시한 남측지역 대도시의 수용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혼란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사회불안정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8명(4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가중빈도: 71), 시

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간 심화되다 그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 6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25%만이 아주가능이라고 답하여 사회불안정에 대해서 한국전문가가 훨씬 더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그림 5-39>.

<그림 5-39> 사회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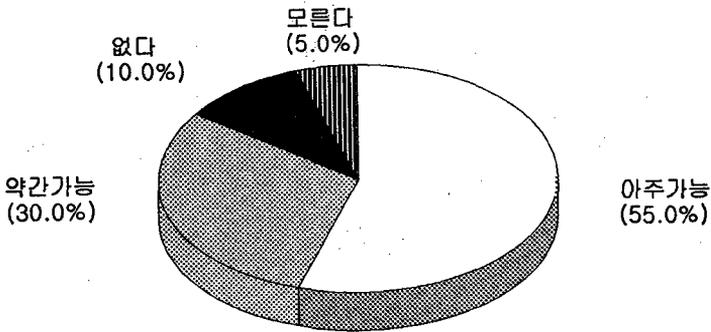
6) 범죄증가

통일 이후 상대적 빈곤감으로 좌절한 북한주민들의 자포자기적 일탈행위로 인해 범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인접지역에 국제조직범죄가 침투하여 마약, 밀무역이 번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의 광역화, 초국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일한국에서의 범죄증가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2명(55%)이 아주가능, 12명(30%)이 약간가능, 4명(10%)이 없다, 2명(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

도: 70)하고 있으며, 한국전문가 7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는 4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 한국전문가가 미국전문가보다 범죄증가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전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까지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 그 이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40>.

<그림 5-40> 범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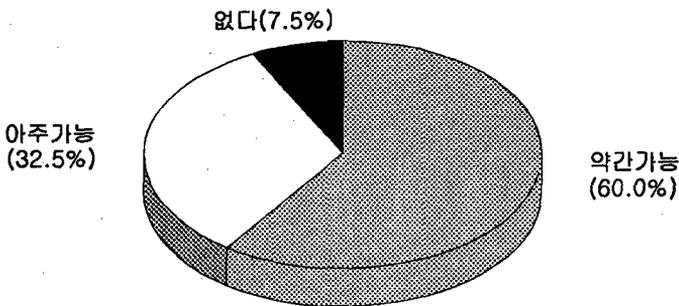
7) 대규모 인구이동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의 붕괴로 대다수 주민들이 직장을 상실함에 따라 유랑민 성격을 띤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남한지역 및 주변국으로의 유입을 기도, 인구이동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또한 이산가족 재회나 고향방문 등으로 남북주민 상호간에 대대적인 인구이동도 예상된다. 남한지역으로의 난민 대량유입을 막기 위하여 통일한국정부는 북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휴전선을 통제, 남한이주를 일정기간 엄격히 통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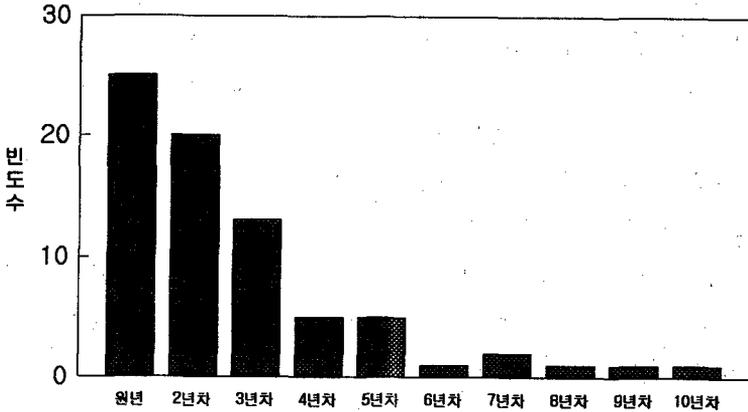
는 한편 식량, 에너지,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경제 재건과 실업 해소, 사회보장제도 확대적용으로 북한측 주민들의 생활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인구이동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통일 이후 남한이주를 간절히 원하는 북한지역 주민을 물리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구이동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3명(32.5%)이 아주가능, 24명(60%)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3)하고 있으며 <그림 5-41>,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2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그림 5-42>.

<그림 5-41> 대규모 인구이동



<그림 5-42>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가능년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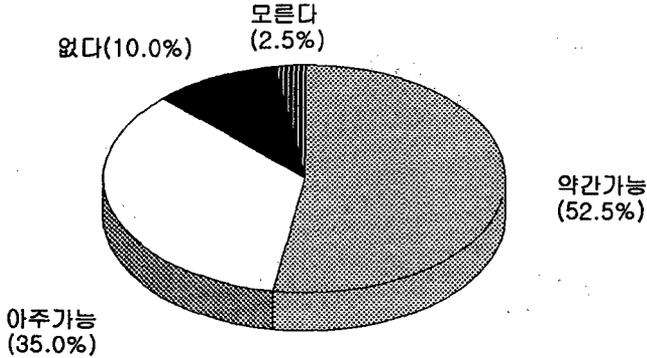


8) 노사분규 심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간의 인적 교류 자유화와 그에 따른 북한지역 노동인력의 대량남하 유입은 남한지역내 노동세력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고용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화로 노사분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노사분규 심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4명(35%)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4명(10%)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1)하고 있으며, 한국전문가 20%가 아주가능이라고 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6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전문가가 한국전문가보다 통일한국에서 노사분규 심화 가능성을 훨씬 높게 예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간을 고비로 그 이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43>.

<그림 5-43> 노사분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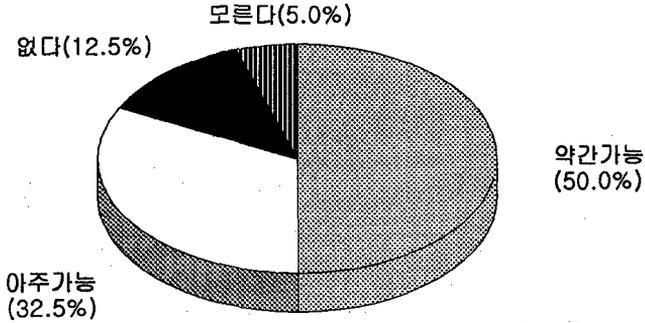


9) 이산가족 상속문제

통일에 따른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호적재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혼과 아울러 남측과 북측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칙상 통일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현실관계를 존중하여 과도기적 특례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통일 이후 이산가족 상속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한·미전문가 40명중 13명(32.5%)이 아주가능, 20명(50%)이 약간가능, 5명(12.5%)이 없다, 2명(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82.5%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가중빈도: 58)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의 10%가 아주가능이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전문가 5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이산가족 상속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2년 내지 3년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44>.

<그림 5-44> 이산가족 상속문제



4. 문화분야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관련 주요 예상사태는 북한주민의 재교육, 역사재평가, 학제통합, 문화·학술분야 용어통합 등 6개의 사태가 예측된다. 문화분야는 예상사태의 숫자는 가장 적으나 모든 항목의 가중빈도가 73 이상으로 통일 이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5-4>.

<표 5-4> 문화관련 주요 예상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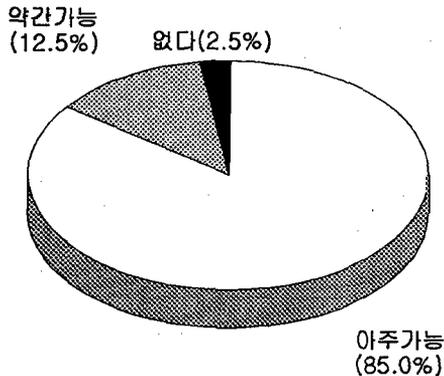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북한주민의 재교육	91	U2
역사재평가	90	U1
학제통합	84	U3
문화·학술 분야 용어 통합	80	U3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74	U1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	73	U3

1) 북한주민의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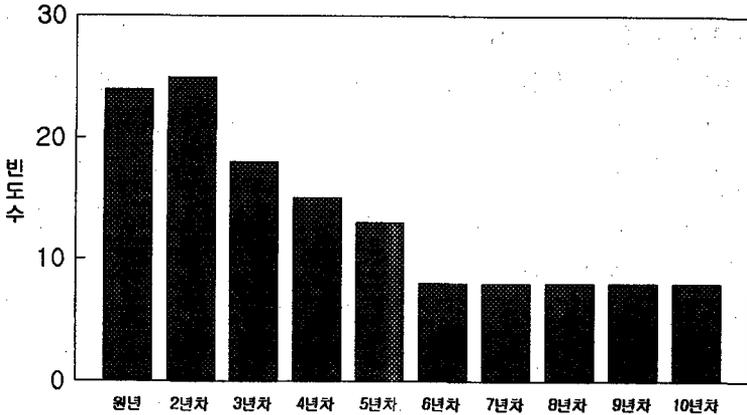
문화관련 주요 예상사태중 가장 가중빈도가 높은 항목은 북한주민을 재교육시키는 것이다. 통일 이전까지 사회주의 교육만 받아온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시키는 문제는 통일한국정부가 직면하게 될 중대사안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편제를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4명(85%)이 아주가능, 5명(12.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91)되었으며<그림 5-45>,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2년을 고비로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46>.

<그림 5-45> 북한주민의 재교육



<그림 5-46> 북한주민의 재교육 발생가능년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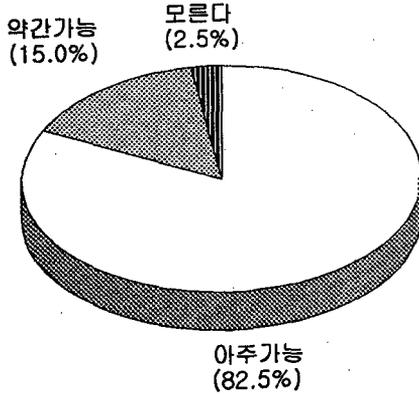


2) 역사재평가

통일이 되면 왜곡된 북한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재평가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일성 가계우상화로 현대사에 대한 왜곡이 심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통일한국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재평가 사업에 관해서 한·미 전문가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가중빈도: 90)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간 정도 지속되다 그 이후 차츰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47>.

<그림 5-47> 역사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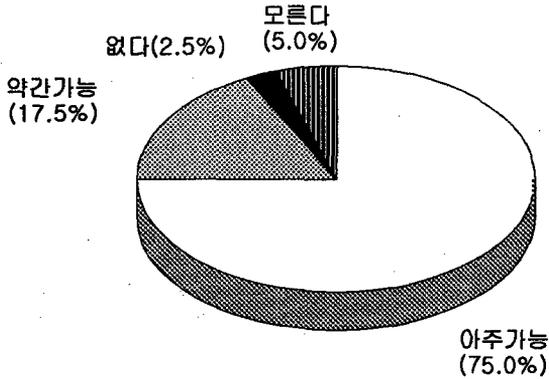


3) 학제통합

통일한국정부는 남북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해서 학제를 개편, 통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교육제도와 내용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며, 북한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제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일 이후 학제통합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0명(75%)이 아주가능, 7명(17.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2명(5%)이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4)되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내지 4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48>.

<그림 5-48> 학제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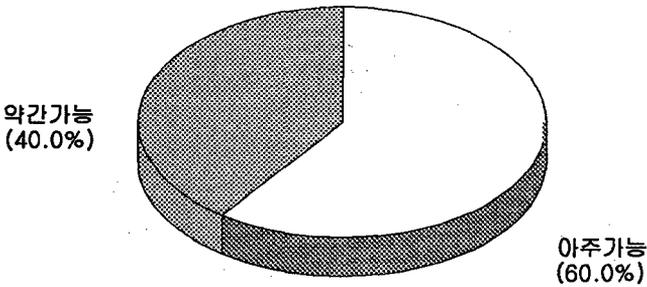


4) 문화·학술분야 용어통합

통일 이후 문화·학술분야 등 사회제분야의 용어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안 각종 언어가 상이해짐에 따라 통일 이후 남북주민들간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먼저 학술·예술분야부터 상이한 용어의 통합을 이룬 후에 사회제분야의 용어통합을 달성해감으로써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문화·학술분야 용어통합에 대해서 한·미 전문가 40명중 24명(60%)이 아주가능, 16명(40%)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견(가중빈도: 80)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5-49>.

<그림 5-49> 문화·학술분야 용어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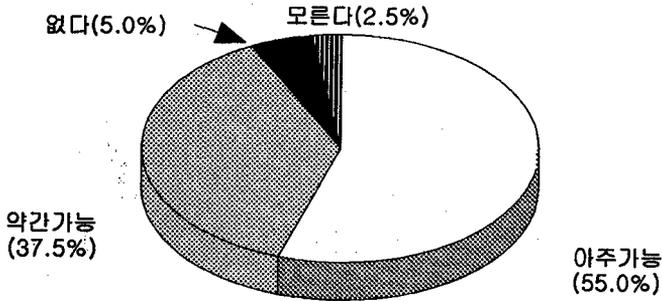


5)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남북주민들은 오랜 분단에 의한 문화적 이질화와 사상적 괴리감으로 정신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북한지역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변형된 문화권을 형성한 반면 남한지역은 외래문화의 범람 영향으로 양측이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들은 이념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2명(55%)이 아주가능, 15명(37.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가중빈도: 74)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 7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45%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 한국전문가들이 미국전문가들보다 통일 이후 사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까지 심화되다 그 이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5-50>.

<그림 5-50> 사상적·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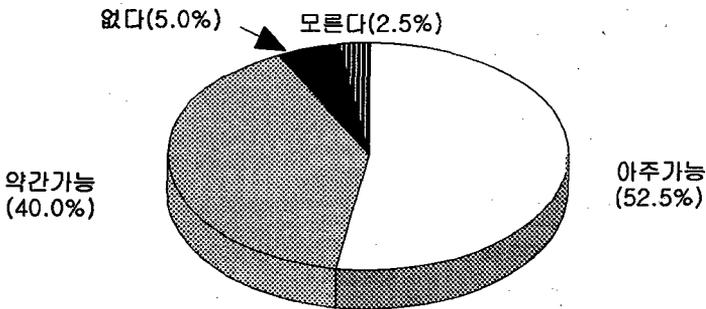
6)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

통일한국은 남북한 주민들이 문화적·이념적 갈등으로 양측이 정신적·심리적 갈등을 빚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회복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계는 잃어버린 과거회복노력을 활발히 진행하여 전통문화 구현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한국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노력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1명(52.5%)이 아주가능, 16명(40%)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73)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 7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3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미 양국 전문가가 큰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미 양측의 문화를 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전문가들은 특별한 노력을 들이

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문화적 이질감은 점차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 반면, 당사자인 한국전문가들은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갈등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을 고비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51>.

<그림 5-51> 문화적 이질감 해소노력



5. 군사분야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군사관련 주요 예상사태는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해체 등 13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5-5>.

<표 5-5> 군사관련 주요 예상사태

예상사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98	U2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90	U1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90	U1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90	U1
주한미군 감축	89	U2
유엔사 해체	86	U1
육군 축소 및 해·공군력 증강	85	U3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81	U1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 반납	76	U4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56	U2
주한미군 완전철수	40	U5
북한군 장교집단 무력시위	40	U1
북한군 일부 무장공비화	28	U1

통일한국은 군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사력을 적정선 규모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해상로 보호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해서 육군은 대폭 감축되고 해·공군은 오히려 전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으로는 연변 등 북한지역 핵처리 문제와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파괴 압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부상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소멸로 주둔 명분이 없어진 유엔사가 해체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통일한국으로 이양됨과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불필요하게 된 미군기지도 이 한국으로 반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는 동북아의 안전을 고려,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의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장교집단의 무력시위나 일부 극력분자들이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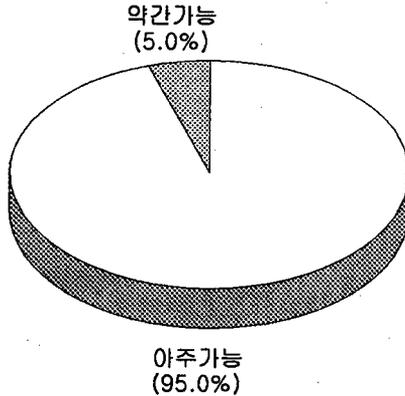
하여 무장공비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군사관련 주요 예상사태중 가중빈도 50이상 사태를 심층 진단해 본다.

1)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군사관련 주요 예상사태 중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문제가 가장 가중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은 통일 이전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통일 이후 군사력 감축문제는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해 우선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통일 이후 북한군은 해체 내지 한국군에 편입되겠으나 한국군의 규모와 국방비도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축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한국정부는 통일한국군에 대한 주변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정한군 규모에 대한 주변국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8명(95%)이 아주가능, 2명(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98)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4년 이내에 적정선 규모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52>.

<그림 5-52> 통일한국군의 적정선 유지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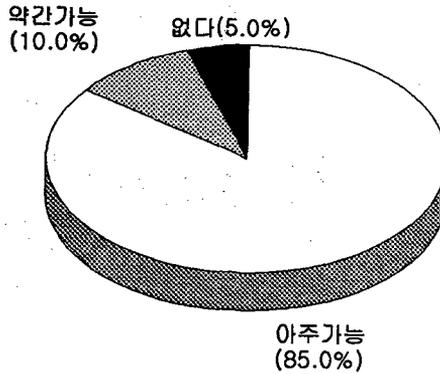
2)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시설 폐기 요구 및 IAEA에 의한 국제적 핵사찰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변지역 핵시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시설로 의혹을 받아왔던 만큼 IAEA의 특별사찰과 아울러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통일한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 핵무기 제조능력을 승계할 것을 우려하여 통일한국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능력의 폐기와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이 핵무장국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면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핵처리 문제 대두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4명(85%)이 아주가능, 4명(10%)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90)되었

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5-53>.

<그림 5-53> 북한지역 핵처리문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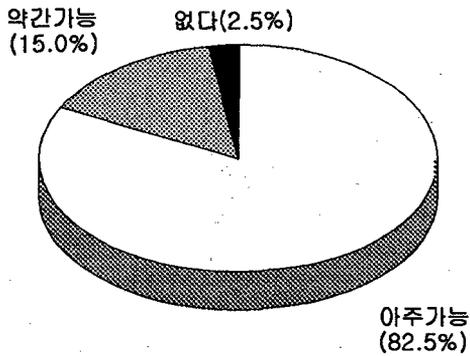


3)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같은 맥락에서 구북한군이 보유했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폐기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과거 생화학무기의 3대 보유국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 무기에 대한 공개적 폐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통일한국정부는 주변국들로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파괴압력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90)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54>.

<그림 5-54> 생화학무기 파괴 압력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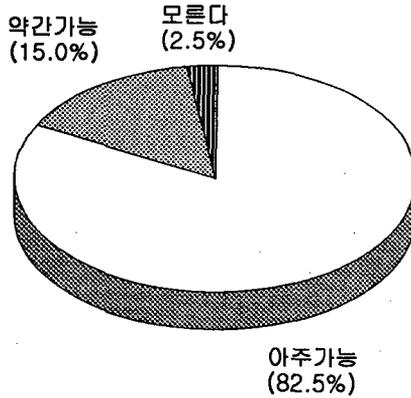


4)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통일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통일한국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UN군이 존속할 명분도 없어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3명(82.5%)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중빈도: 90),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 나 이듬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55>.

<그림 5-55>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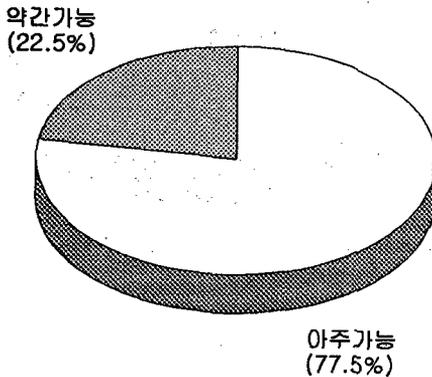
5) 주한미군 감축

통일 이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다. 통일로 인한 북한 위협 소멸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을 국내 재야단체들과 중국측에서 제기함과 아울러 미국내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요구가 증대되어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고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1명(77.5%)이 아주가능, 9명(22.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 응답자 전원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89)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의 60%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9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미국전문가들이 한국전문가들보다

주한미군 감축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감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56>.

<그림 5-56> 주한미군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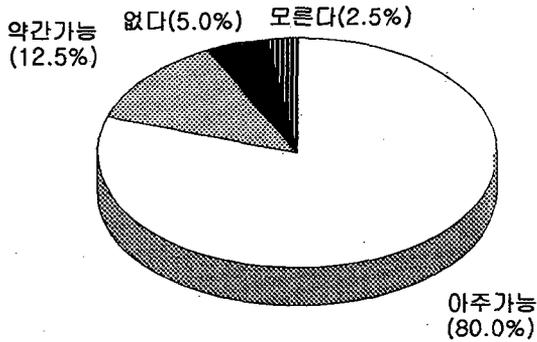


6) 유엔사 해체

북한의 소멸로 유엔사의 불필요성이 제기되며 주한 유엔군사령부, 정전위, 중립국감시위 등이 해체되고 유엔군은 전원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한·미 방위조약이 재검토되는 등 한·미간의 관계도 재정립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2명(80%)이 아주가능, 5명(12.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라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6)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이나 이듬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57>.

<그림 5-57> 유엔사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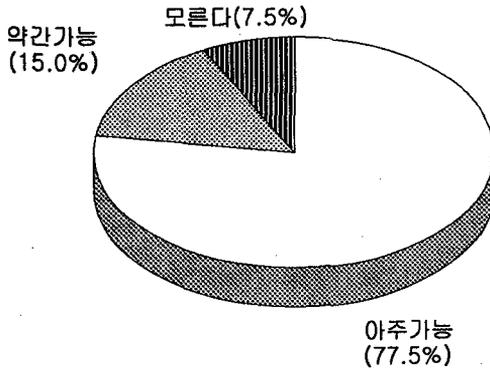


7) 육군 축소 및 해·공군 증강

통일한국의 전력구조는 북한의 소멸로 주변국들과의 분쟁에 대비한 전력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육군은 감축되고 해·공군 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 이후 동북아정세는 주변국들이 국경보다는 해군력 강화를 통한 해상로 보호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통일한국도 최소한 2대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보유하여 해상로를 보호하고 중간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분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1명(77.5%)이 아주가능, 6명(15%)이 약간가능, 3명(7.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5)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이면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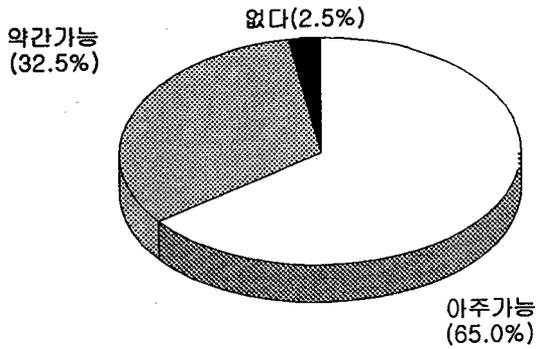
<그림 5-58> 육군축소 및 해공군 증강



8)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통일 이후 북한지역 핵시설 폐기문제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국내외에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한국정부도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출범과 동시에 외교안보기조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에 대하여 한·미전문가 40명중 26명(65%)이 아주가능, 13명(32.5%)이 약간가능,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가중빈도: 81)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동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59>.

<그림 5-59> 한반도 비핵화 논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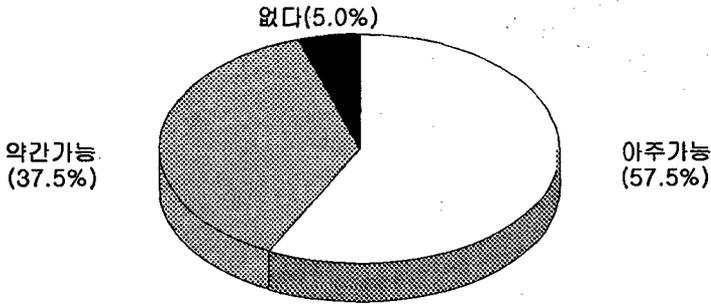


9)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반납

통일 이후 미군의 감축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필요불급한 미군기지들이 통일한국정부로 반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북한위협 의 소멸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지주변 주민들의 기지축소와 반환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산을 위시한 미군기지의 한국반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3명(57.5%)이 아주가능, 15명(37.5%)이 약간가능, 2명(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76)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60>.

<그림 5-60> 용산 등 미군기지 한국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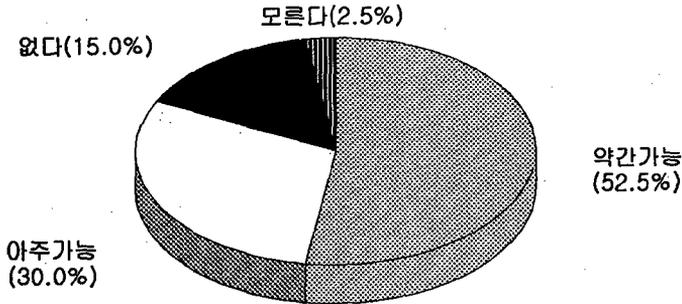


10)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통일후 100만여명의 북한군을 단계적으로 해체 내지 한국군에 편입시켜야 하나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반발로 양측 군대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체되는 북한군의 직장알선이나 실업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북한군의 반발로 남북한 군대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2명(30%)이 아주가능, 21명(52.5%)이 약간가능, 6명(1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 82.5%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56)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61>.

<그림 5-61> 남북한 군대통합으로 인한 갈등



6. 외교분야

한·미 전문가 40명이 전망하는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외교관련 주요 예상사태는 남북한의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노선 추구, 제3세계 외교 활성화 등 9개 항목이다<표 5-6>.

<표 5-6> 외교관련 주요 예상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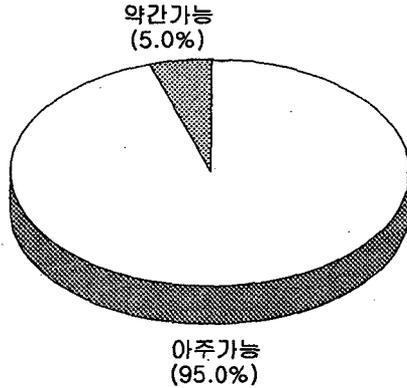
예 상 사 태	가중빈도	최빈년도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98	U1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	84	U5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 추구	76	U5
제3세계 외교 활성화	63	U5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61	U1
아·태 평화 안보 기구 창설 주도	61	U3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각	51	U2
대외원조 확대	38	U10
북방 지역 국경 재조정	19	U5

통일한국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일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한 후 새로운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middle power)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제3세계 외교를 활성화하고 UN 평화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태 평화안보기구 창설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중요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통일한국이 대외원조를 확대할 여력이 없을 것이며, 백두산 경계비 등을 문제삼아 북방지역 국경을 재조정하고자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외교관련 주요 예상사태중 가중빈도 50이상 되는 사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통일과 동시에 통일한국정부는 남북한의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통일이 달성되었음을 가시적으로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38명(95%)이 아주가능, 2명(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외교 주요 예상사태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98)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원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62>.

<그림 5-62> 남북한 재외공관 통폐합 및 UN의석 단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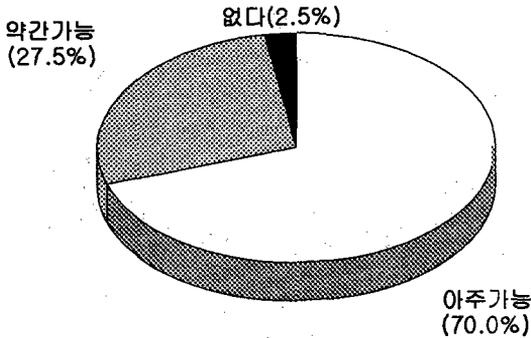


2)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 강화

통일한국은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middle power)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소멸로 동북아지역에서 미·일·러·중 4국간의 지역내 이해관계 조정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안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항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8명(70%)이 아주가능, 11명(27.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고 응답하여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84)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5-63>.

<그림 5-63> 국제사회에서 middle power로서 외교적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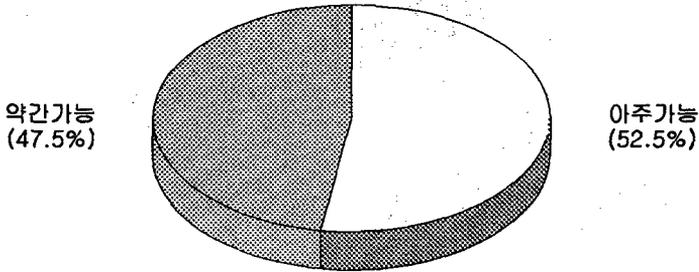


3)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노선 추구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주변 강대국 외교의 종속변수에서 탈피, 새로운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되면서 4자회담과 같은 미·중 중심의 한반도 주변강대국 협력외교체제가 불필요해지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로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대외정책을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노선 추구가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21명(52.5%)이 아주가능, 19명(47.5%)이 약간가능이라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76)하고 있다<그림 5-64>.

<그림 5-64> 통일한국의 새로운 외교노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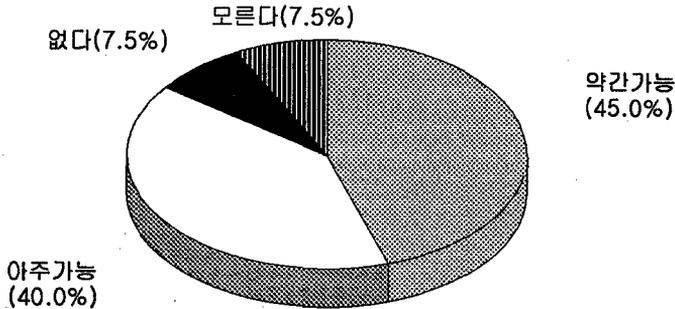


4) 제3세계 외교 활성화

통일이 되면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통일한국의 제3세계 외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통상외교를 강화하기를 희망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일한국의 외교정책과 맞물려 제3세계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한국의 제3세계 외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6명(40%)이 아주가능, 18명(4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 3명(7.5%)이 모른다고 응답,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중빈도: 63),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65>.

<그림 5-65> 제3세계 외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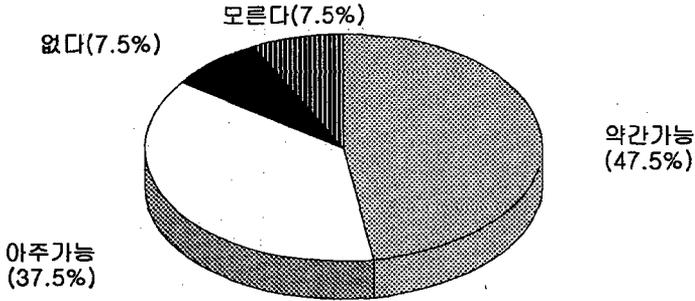


5)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한국의 통일로 동서냉전이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소규모의 분쟁에 대하여 UN평화군을 활용하여 평화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간세력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 통일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UN평화군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한국의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가능성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5명(37.5%)이 아주가능, 19명(47.5%)이 약간가능, 3명(7.5%)이 없다, 3명(7.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측(가중빈도: 61)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문가 45%가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국전문가 30%만이 아주가능이라고 답하여 한국전문가들이 통일한국의 UN평화군 활동가능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66>.

<그림 5-66> UN평화군 활동 적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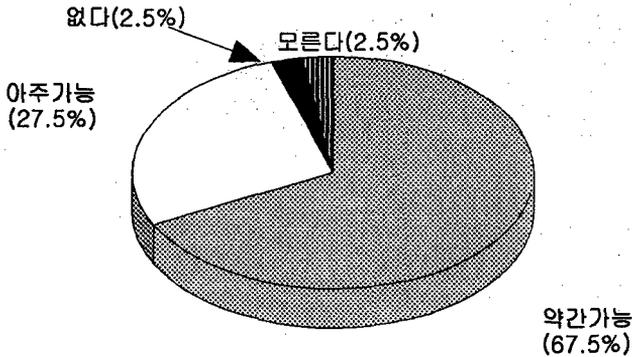


6) 아·태 평화·안보기구 창설 주도

한반도의 통일로 한·미, 미·일의 양자 방위체제가 점차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한국이 NEASED가 지역방위협력체로 정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APEC을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협의기구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가동이 지연되었던 NEACD를 NEASED로 전환하고 ARF식의 안보대화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아·태 평화·안보를 위해서 통일한국이 새로운 기구 창설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11명(27.5%)이 아주가능, 27명(67.5%)이 약간가능, 1명(2.5%)이 없다, 1명(2.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망(가중빈도: 61)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3년 내지 5년 차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5-67>.

<그림 5-67> 아태 평화·안보 기구창설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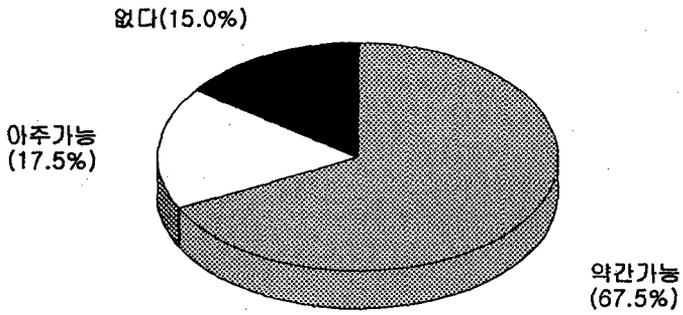


7)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상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세력균형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러시아 등 국내사정으로 역내 지역세력경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의 복잡한 대립과 동북아상황의 불안정을 이유로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각에 대하여 한·미 전문가 40명중 7명(17.5%)이 아주가능, 27명(67.5%)이 약간가능, 6명(15%)이 없다고 응답하여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가중빈도: 51)되고 있다. 한편 미국전문가 30%가 아주가능이라고 답한 반면, 한국전문가는 5%만이 아주가능이라고 응답하여 한반도 중립화 논의에 관한 한 한국전문가들이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3년 내지 4년 이내에 발생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5-68>.

<그림 5-68> 한반도 중립화 논의 부상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미 전문가 40명이 예견한 통일한국에서 발생가능한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진로와 변화상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델파이 기법은 오늘날 미래예측 수단으로 사회과학자들간에 널리 쓰이고 있는 예측기법의 하나이다. 델파이 조사대상이 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년간 연구한 학자들과 남북문제에 정통한 실무자들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추출한 견해를 계량화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진로를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전문가들의 80%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합의통일 가능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류·물류기지로 부상할 것이며, 역내 신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어느 편과 우방이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신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므로 대륙세력(중·러)과 해양세력(미·일)은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고려할 때 19세기말과 같이 한반도가 양세력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정부는 구공산잔재를 일소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부자 우상화 상징물들을 철거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구공산당 간부와 한국전쟁 전범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합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한 후 총선을 실시하여

신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중 어느 체제가 통일한국 신정부에 더 효율적이냐를 두고 각 정파간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가 통일시까지 계속될 경우를 상정한 예상이며 조사당시의 한국의 정치체제가 내각제인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일이 되면 좌파이념을 배제할 논리가 없어짐에 따라 구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집단이 다양화되고 이로 인한 보혁 갈등으로 정치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공산당 간부들의 인권침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 가족들의 국외 망명이 예상되며, 망명을 거부하는 일부 골수당원이나 군장교들은 산간등지에 은거하면서 저항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가 미미하여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일초기에는 휴전선을 잠정 통제하면서 북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통일한국정부에 의하여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한국의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나 통일비용 과다부담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통일초기 주변 4국이 북한지역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고려할 때 주변국들의 이러한 접근은 매우 신중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반도는 민족공동의 삶의 터전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민족 삶의 터전을 국제화, 지역화 등의 새로운 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철도, 항만, 통신, 도로, 망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화폐를 통합하고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국영 및 공기업, 공장기업소, 집단농장 등을 민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한지역 기업의 북한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명실공히 남북경제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한국은 국제법상 원칙에 입각, 헌법체제의 범위내에서 북한의 채권·채무를 승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비용 과다부담으로 외채가 증대될 것이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콘소시움이 구성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면서 외환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붕괴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보호 대책이 급선무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세금부담이 급증하며, 통화남발과 물자공급의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남한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난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랫동안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해 온 북한지역 주민들은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각한 집단적·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패배의식, 자신감 상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정적 등으로 스스로 이등국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남북지역 주민들간에 심리적 장벽이 생성되고 지역갈등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아 대량 남하하는 경우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는 수용한계를 넘어 치안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 틈을 이용해 범죄가 급증하면 사회전체가 혼란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정부가 북한지역 주민보호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량 인구가동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치안공백이 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통일에 따른 이산가족의 재회와 호적정리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혼으로 인한 남측과 북측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중혼문제는 통일시점에 가서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한국정부는 남북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해서 학제를 개편하고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교육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북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학술·예술분야에 이어 제분야의 용어를 통합함으로써 언어차이로 인한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아울러 문화적·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계는 전통문화 구현을 위한 과거회복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되면 국제사회의 북한지역 핵시설 폐기 요구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파기 압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사력의 감축문제도 주변국들에 의해 제기될 것이다. 통일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통일한국군을 적정선 규모로 감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육군은 대폭 축소하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은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소멸로 주둔명분이 없어진 유엔사가 해체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으로 불필요해진 용산 등 미군기지들이 한국으로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대통합으로 군복을 벗게 되는 북한군 장교들의 집단 무력시위나 일부 극력분자들의 공비화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이 못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통일과 동시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재외공관을 통폐합하고 UN의석을 단일화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통일이 달성되었음을 가시적으로 알리면서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간세력국가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3세계 외교를 활성화하고 UN평화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태 평화안보기구를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세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으나 통일비용부담 등으로 통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대외원조를 증가시킬 여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편 통일한국이 동북아 신질서형성에 주요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일한국의 신장된 위상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동북아가 새로운 5강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북방지역으로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와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관계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일부 국수주의자들은 고토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이 운동이 동북 3성의 조선족과 사할린

동포들과 연계되는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신생통일국가인 한국이 북방의 강대국들과 국경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사전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위협의 소멸로 한·미 방위조약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한·미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닌 미·일과 같은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한반도 주둔 미군이 완전철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일간에는 해양경계선을 두고 마찰이 지속될 것이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한·미·일 관계는 동북아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 결속으로 동북아에 냉전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에서는 미군의 감축으로 발생할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군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해상로 확보를 구실로 해군력 증강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괄목할 수준이 될 것이며, 이에 자극받은 러시아와 통일한국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해온 북한의 소멸로 역내에는 안보불안요인이 감소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이며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체제구축 노력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태시대의 중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할 것이다.

<부록 I> 설문조사자 명단

한국전문가(가나다순)

학계: 9명

강성학 고려대학교 교수

김부기 경기대학교 교수

김학준 인천대학교 총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유세희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우 서강대학교 교수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최평길 연세대학교 교수

하용출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소: 4명

노용환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관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교수

관계: 4명

이호: 통일원 정보분석실장

전봉근: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

정태익: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인론계: 3명

도준호 조선일보 부국장

박준영 중앙일보 부국장

마권수 KBS 부장

20명

미국전문가(ABC순)

학계: 5명

Dr. Harry Harding, Dean,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mbassador William James R. Lilley, Resident Fellow, Institute for
Global Chines Affairs, University of Maryland

Dr. James T. Myers, Director, Center for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r. Robert A. Scalapino, Robson Research Professor of Government
Emeritu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mbassador Richard L. Walker, President, The Richard L. Walker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연구소: 9명

Dr. L. Gordon Flake, Director of Rearch, KEI of America

Dr. Gerrit W. Gong, Director, Asian Studies Program, CSIS

Dr. Selig Harrison, Guest Scholar, The Woodrow Wilson Center

Dr. Robert Manning, Director of Research, 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and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Dr. Michael J. Mazarr, Editor, The Washington Quarterly, CSIS

Dr. Daryl M. Plunk, Senior Fellow, Asian Studies Center, The Heritage Foundation

Dr. William J. Taylor, Senior Vice President, CSIS

Mr. Jonathan B. Tombes, Research Associate, AEI

Dr. W. Robert Warne, President, KEI of America

관계: 4명

Mr. Guy R. Arrigoni, North Korean Analyst, DIA, Pentagon

Dr. Larry A. Nicksch, Specialist in Asian Affairs, CRS

Mr. C. Kenneth Quinones, North Korean Analyst, Department of State

Dr. Robert G. Sutter, Senior Specialist in International Politics, CRS

기타: 2명

Ambassador William Clark, Chairman, Japan Society Inc.

Dr. David I. Steinberg, Representative, Asia Foundation

<부록 II> 분야별 예상사태 도표(가중치 49이하)

1. 정치분야

북한지도층 저항(가중빈도: 48)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2	55.0	57.9
없 다	8	20.0	21.1
아주가능	8	20.0	21.1
모 른 다	2	5.0	-
합계	40	100.0	100.0

신수도 선정(가중빈도: 29)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19	47.5	51.4
약간가능	13	32.5	35.1
아주가능	5	12.5	13.5
모 른 다	3	7.5	-
합계	40	100.0	100.0

주변 4국의 북한지역 관리참여(가중빈도: 26)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21	52.5	53.8
약간가능	15	37.5	38.5
아주가능	3	7.5	7.7
모 른 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미국식 연방제(가중빈도: 21)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25	62.5	65.8
약간가능	9	22.5	23.7
아주가능	4	10.0	10.5
모 른 다	2	5.0	-
합계	40	100.0	100.0

2. 경제분야

외채증대로 인한 외환위기(가중빈도: 46)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5	62.5	71.4
아주가능	6	15.0	17.1
없 다	4	10.0	11.4
모 른 다	5	12.5	-
합계	40	100.0	100.0

3. 사회분야

이산가족 중혼문제(가중빈도: 39)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3	57.5	67.6
없 다	7	17.5	20.6
아주가능	4	10.0	11.8
모 른 다	6	15.0	-
합계	40	100.0	100.0

치안공백(가중빈도: 35)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2	55.0	56.4
없다	14	35.0	35.9
아주가능	3	7.5	7.7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4. 군사분야

주한미군 완전철수(가중빈도: 40)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16	40.0	41.0
없다	15	37.5	38.5
아주가능	8	20.0	20.5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북한군 장교집단 무력시위(가중빈도: 40)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18	45.0	48.6
없다	12	30.0	32.4
아주가능	7	17.5	18.9
모른다	3	7.5	-
합계	40	100.0	100.0

북한군 일부 무장공비화(가중빈도: 28)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19	47.5	48.7
약간가능	18	45.0	46.2
아주가능	2	5.0	5.1
모 른 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5. 외교분야

대외원조 확대(가중빈도: 38)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0	50.0	55.6
없 다	11	27.5	30.6
아주가능	5	12.5	13.9
모 른 다	4	10.0	-
합계	40	100.0	100.0

북방지역 국경재조정(가중빈도: 19)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24	60.0	68.6
약간가능	7	17.5	20.0
아주가능	4	10.0	11.4
모 른 다	5	12.5	-
합계	40	100.0	100.0

6. 통일한국과 주변4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강화(가중빈도: 45)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4	60.0	61.5
없다	9	22.5	23.1
아주가능	6	15.0	15.4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가중빈도: 41)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3	57.5	62.2
없다	9	22.5	24.3
아주가능	5	12.5	13.5
모른다	3	7.5	-
합계	40	100.0	100.0

한·일 우호관계 강화(가중빈도: 40)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2	55.0	56.4
없다	12	30.0	30.8
아주가능	5	12.5	12.8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한·중 우호관계 강화(가중빈도: 36)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7	67.5	69.2
없다	11	27.5	28.2
아주가능	1	2.5	2.6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한·중 국경분쟁(가중빈도: 34)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5	62.5	64.1
없다	13	32.5	33.3
아주가능	1	2.5	2.6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한·일관계 악화(가중빈도: 34)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1	52.5	53.8
없다	15	37.5	38.5
아주가능	3	7.5	7.7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한·미관계 소원화(가중빈도: 31)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3	57.5	57.5
없 다	16	40.0	40.0
아주가능	1	2.5	2.5
합계	40	100.0	100.0

한·중 외교갈등 심화(가중빈도: 30)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2	55.0	56.4
없 다	16	40.0	41.0
아주가능	1	2.5	2.6
모 른 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북한지도층 망명처 제공으로 인한 한·중 갈등 (가중빈도: 29)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18	45.0	48.6
약간가능	15	37.5	40.5
아주가능	4	10.0	10.8
모 른 다	3	7.5	-
합계	40	100.0	100.0

사할린 동포문제로 인한 한-러간 마찰(가중빈도: 21)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다	20	50.0	54.1
약간가능	17	42.5	45.9
모른다	3	7.5	-
합계	40	100.0	100.0

7. 동북아지역 안보상황

미-중간 관계 악화(가중빈도: 49)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33	82.5	84.6
없다	3	7.5	7.7
아주가능	3	7.5	7.7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미군철수에 따른 역내 군비경쟁 심화(가중빈도: 46)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7	67.5	69.2
없다	7	17.5	17.9
아주가능	5	12.5	12.8
모른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해상로 확보 구실로 일본의 전진방어 정책 선언(가중빈도: 43)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20	50.5	60.6
아주가능	7	17.5	21.2
없 다	6	15.0	18.2
모 른 다	7	17.5	-
합계	40	100.0	100.0

영토분쟁으로 지역안보 위협(가중빈도: 38)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약간가능	30	75.0	78.9
없 다	8	20.0	21.1
모 른 다	2	5.0	-
합계	40	100.0	100.0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와 중·러관계 결속(가중빈도: 28)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22	55.0	56.4
약간가능	12	30.0	30.8
아주가능	5	12.5	12.8
모 른 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미·일 동맹체제 약화(가중빈도: 24)

발생가능성	빈도	백분율	유효백분율
없 다	21	52.5	53.8
약간가능	17	42.5	43.6
아주가능	1	2.5	2.6
모 른 다	1	2.5	-
합계	40	100.0	100.0

<부록 III> 텔파이 1, 2차 설문서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 이후대비 연구의 일환으로 통일한국의 지정·지경학적 특성 및 위상, 그리고 통일한국 등장으로 인한 역내 국제질서 변화 등을 포함하는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1997년도 중점과제로 선정·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 정부, 연구소 및 언론계에 종사하는 한반도 및 주변 4국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문지 조사와 그 결과를 전산처리하는 미래예측조사(Delphi Exercise)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차조사는 설문서에 요구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전문적인 견해를 10가지 내외로 기록하고, 2차조사에서는 예측 빈도수가 제일 많은 순서로 정리한 예상사태 목록에 발생가능성의 강도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민족통일연구원

델파이 1차 설문서

1. 한국 통일이 가능한 시기

통일시기	통일방법

2. 통일한국의 지정·지경학적 특성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태를 10가지 내외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그 예상사태의 명칭, 원인, 발생시기를 명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ersonal Computer나 Type Writer로 기술하시면 좋겠고, 손으로 쓰시는 경우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명확하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사태 번호, 명칭	이 유	발생시기

3.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인한 역내 국제질서 변화 및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예상사태를 10가지 내외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그 예상사태의 명칭, 원인, 발생시기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사태 번호, 명칭	이 유	발생시기

델파이 2차 설문서

I. 통일시기 및 방법

통일시기	2000	()	통일방법	흡수통일	()
	2005	()		합의통일	()
	2010	()			
	2015	()			
	2020	()			
	2020이후	()			

II. 한반도 지정학적 위상 관련 예상사태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 회복	아주가능	()	비 고
	약간가능	()	
	없 다	()	
	모 른 다	()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각축	아주가능	()	2)
	약간가능	()	
	없 다	()	
	모 른 다	()	
역내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 변수	아주가능	()	3)
	약간가능	()	
	없 다	()	
	모 른 다	()	
역내 경제교류협력 및 정보·교통·물류기지 중심지로 부상	아주가능	()	4)
	약간가능	()	
	없 다	()	
	모 른 다	()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 외 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의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대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